2021

오스트리아 개황



오스트리아 국기



- 1230년 중세 바벤베르크 왕조의 문장에서 유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의 하나로 간주되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18년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시기부터 정식 국기로 채택

- 동일한 가로 크기의 빨간색-흰색-빨간색 배색의 기원은 1191년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레오폴드 5세 대공의 흰색 군복이 피로 물들어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으나, 허리 벨트를 풀자 그 부분만 피가 묻지 않고 흰색으로 남아있던 모양을 형상화한 데에서 유래

- 연방 정부 기관들은 국기 중앙에 독수리 국가 문장이 삽입된 기를 사용 중



오스트리아 국가 문장



- 1919.2월 제헌의회 선거 이후 처음 제정되어, 1945년 제2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와 같이 수정

- 검정 독수리는 머리 위에 성곽 모양의 금빛 왕관을 쓰고 있으며, 독수리는 오스트리아의 주권, 왕관은 시민계층(부르주아)을 상징

- 독수리 발 오른쪽의 망치는 노동계층을, 왼쪽의 낫은 농민계층을 상징하며, 끊어진 쇠사슬은 나치 독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

오스트리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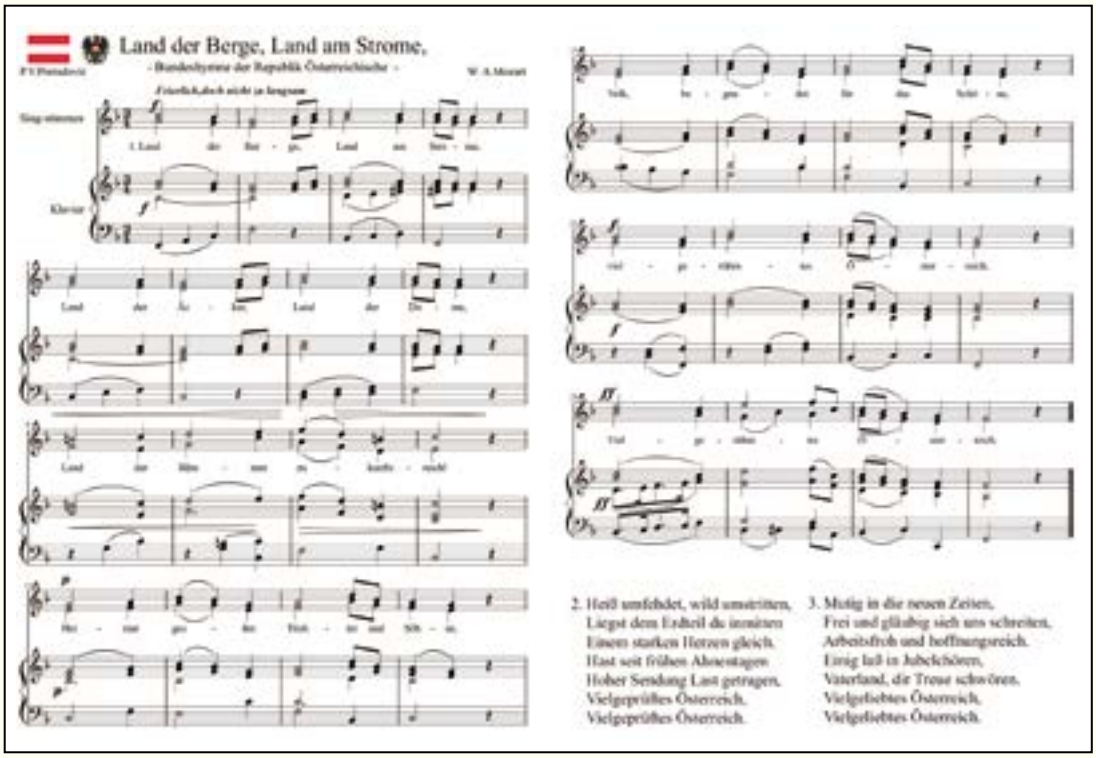
○ 국가명 : 산의 나라, 강의 나라(Land der Berge, Land am Strome)

※ 1947.2.25. 채택

○ 작　사 : 파울라 폰 프레라도비치(Paula von Preradović)

○ 작 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또는 요한 홀처(Johann Holzer)

※ 1947년 채택 당시에는 모차르트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홀처가 작곡했을 가능성 유력(오스트리아 총리실 자료 참조)



○ 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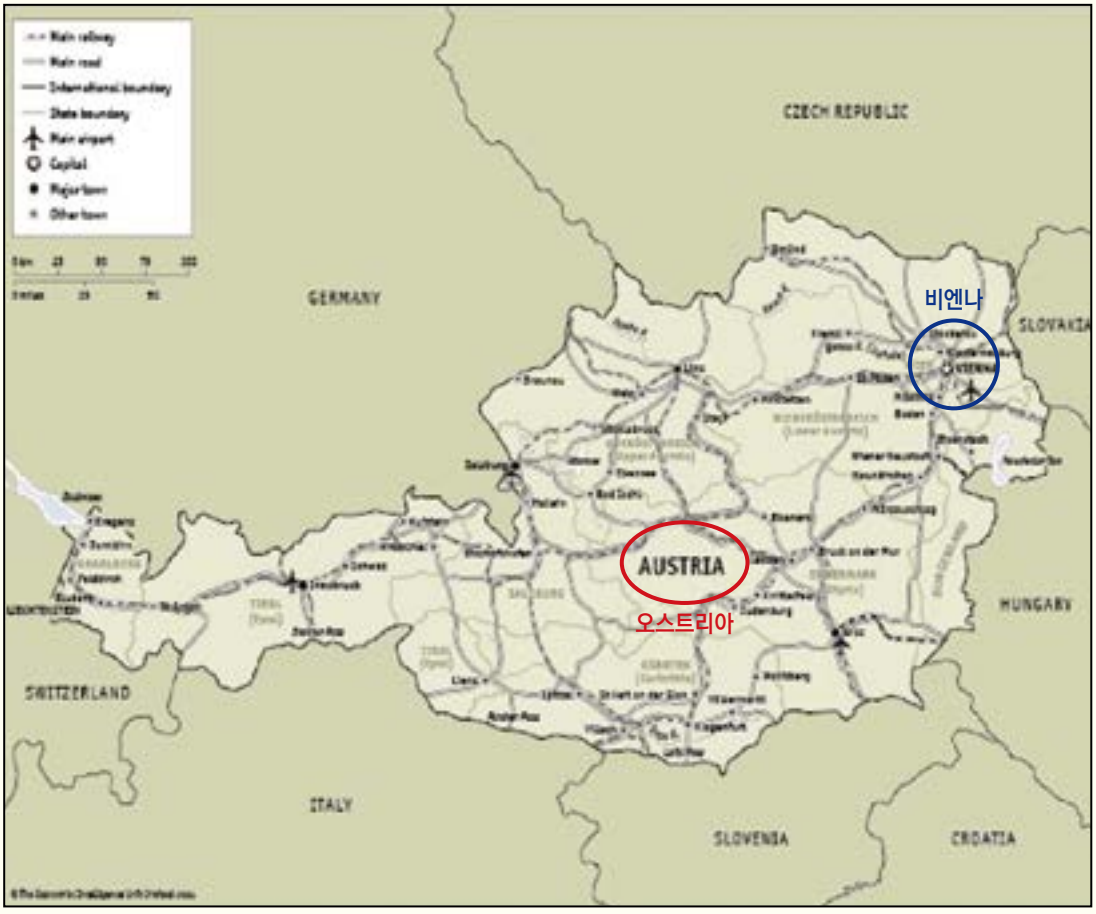
산의 나라, 강의 나라/ 들판의 나라, 성당의 나라

찬란한 미래를 가진 망치의 나라/ 위대한 딸들과 아들들의 고향

국민들은 아름다움과 은총을 받았다네

큰 찬양을 받은 오스트리아/ 큰 찬양을 받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지도


CZECH REPUBLIC
GERMANY
비엔나
SLOVAKIA
AUSTRIA
오스트리아
HUNGARY
SWITZERLAND
ITALY
SLOVENIA
CROATIA


Ober-
österreich
오버외스터라이히
Nieder-
österreich
니더외스터라이히
Wien 비엔나
Vor-
arlberg
포랄베르크
Tirol
티롤
Salzburg
잘츠부르크
Steiermark
슈타이어마르크
Burgen-
land
부르겐란드
Kärnten
케른튼
Quelle: Wikipedia

오스트리아 연방 9개주

	부르겐란트 (Burgenland) 수도 : 아이젠슈타트 면적 : 3,965km^2 인구 : 29만명		슈타이어마르크 (Steiermark) 수도 : 그라츠 면적 : 16,400km^2 인구 : 125만명
	케른튼(Kärnten) 수도 : 클라겐푸르트 면적 : 9,537km^2 인구 : 56만명		티롤(Tirol) 수도 : 인스부르크 면적 : 12,648km^2 인구 : 76만명
	니더외스터라이히 (Niederösterreich) 수도 : 장크트 푈텐 면적 : 19,180km^2 인구 : 168만명		포랄베르크 (Vorarlberg) 수도 : 브레겐츠 면적 : 2,601km^2 인구 : 40만명
	오버외스터라이히 (Oberösterreich) 수도 : 린츠 면적 : 11,982km^2 인구 : 149만명		비엔나(Wien) * 도시주 면적 : 415km^2 인구 : 191만명
	잘츠부르크 (Salzburg) 수도 : 잘츠부르크 면적 : 7,155km^2 인구 : 56만명		

※ 출처 : 오스트리아 통계청(2021.1월 기준)

CONTENTS



Part I. 개 관 11

1. 개관 12
2. 우리나라와의 관계 13
3. 오스트리아 약사 14

Part II. 정치/외교/국방 19

1. 정치 제도 20
2. 최근 국내 정세 31
3. 대외관계 33
4. 군사현황 36

Part III. 경제/통상/개발 39

1. 주요특징 40
2. 산업분야별 현황 42
3. 에너지 48
4. 과학기술 53
5. 대외무역 55
6. 공적 개발원조 57
7. 최근 경제동향 59

Part IV. 사회/문화 63

1. 사회·복지 제도 64
2. 교육제도 67
3. 언론 70
4. 문화·예술 72



Part V. 우리나라와의 관계 77

1. 정무 관계 78
2. 경제·통상 관계 79
3. 과학기술 협력 관계 83
4. 문화 관계 84
5. 재외동포 현황 84
6. 친선단체 현황 86
7. 북한과의 관계 88

Part VI. 부 록 91

1. 주요인사 인적사항 92
2. 역대 공관장 97
3. 오스트리아 소재 주요 국제기구 개황 99











2021 오스트리아 개황 · AUSTRIA



PART I

개 관

1. 개관

2. 우리나라와의 관계

3. 오스트리아 약사

1. 개관

가. 오스트리아 일반

국 명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
수 도	비엔나(독일어로 '빈(Wien)', 인구 191만명)
면 적	83,871㎢(한반도의 약 2/5)
인 구	약 890만명
민 족	오스트리아계(80.8%), 독일계(2.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계(1.9%), 터키계(1.8%), 세르비아계(1.6%), 루마니아계(1.3%), 기타(10%)
언 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60%), 동방정교회(8.7%), 이슬람(8%), 개신교(3%), 무교(23%) 등
기 후	대륙성 기후(연평균 최고기온 35℃/ 최저기온 -15℃)

나. 오스트리아 정치

국가형태		연방공화국(9개 州로 구성)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주요인사	대통령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외교장관	알렉산더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의회		양원제(상원 61석, 하원 183석)
주요정당		국민당(ÖVP), 사민당(SPÖ), 녹색당, 자유당(FPÖ), NEOs 등
국경일		10.26.(1955년 중립국 선언 기념일)
국제기구 가입		UN(1955.12.14.), EU(1995.1.1.)

다. 오스트리아 경제(2020)

GDP	4,286억불	1인당 GDP	48,154미불
경제성장률	-6.6%	실업률	5.3%
물가상승률	1.4%	화폐단위	유로(1$=0.85 EURO)
교역규모	3,179억불(수출 1,620억불/ 수입 1,559억불)		
산업구조	서비스업(70.3%), 제조업·광업(28.4%), 농업(1.3%)		

(출처 : 2021.5월 현재, IMF/ EIU)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우호통상조약 체결 : 1892.6.23.(고종 29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65.5.22.
주요인사 교류현황	(오→韓) △2007.4월 피셔 대통령 국빈 방문, △2019.2월 쿠르츠 총리 공식 방한 (韓→오) △2004.10월 이해찬 국무총리, △2018.5월 이낙연 국무총리 공식방문
교역현황	총 교역량 : 26.94억불(2020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 : 10.66억불(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건전지/축전지 등) - 수입 : 16.28억불(승용차, 원동기/펌프,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투자현황	(오→韓) 2020년말 누계 신고금액 기준 2.9억불(152건) (韓→오) 2020년말 누계 신고금액 기준 16억불(125건)
동포현황	약 2,500명(2021.5월 현재)
북한과의 관계	1974.12.17. 외교관계 수립 -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관은 1976.9월 설립(2020.3월 최강일 대사 부임) - 2012년부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북한 겸임 중(이전에는 주중국대사가 겸임)

3. 오스트리아 약사

가. 고대

○ 기원전 4만~3.5만년부터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갈겐베르크의 비너스”및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토용”등의 유물 발견

○ 켈트족, 반달족, 로마족 등 여러 종족이 살았으며, 기원전 800년~기원전 400년간 켈트족이 세운 노리쿰 왕국 시기

나. 로마제국 시대

○ 기원전 1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 로마 제국에 복속되었으나, 4세기 이후 바이에른계의 게르만족이 다수 유입

○ 6세기 무렵부터 바바리아족, 알레만족 등이 정착하였으며, 동쪽의 슬라브족도 아리아족에게 쫓겨 이동

다. 중세 시대

○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가 신성로마제국을 세우면서 신성로마제국의 동방 변경(행정구역)으로 편입

- 동방의 나라, “오스트마르크(Ostmark)”로 명명

○ 976년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바벤베르크가의 레오폴드에게 이 지역을 봉토로 하사하였고, 당시 문서에 ‘오스타리히(Ostarrichi)’라는 국명이 사용

○ 1156년 신성로마제국 내 권력 세습이 가능한 독립적인 오스트리아 공국이 탄생하였으며, 비엔나(Wien)가 오스트리아 공국의 수도로 지정

- 1192년 오스트리아 인근 슈타이어마르크 공국의 혈통이 끊기면서, 오늘날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일부 지역이 오스트리아 공국으로 편입

라. 합스부르크 왕가(1278~1918)

(1) 초기

○ 1278년 합스부르크가(루돌프 1세)가 오스트리아 공국의 왕위 계승

- 1273년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즉위한 루돌프 1세는 보헤미아 왕(오또카 프레미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동 지역 획득

○ 1452년 프리드리히 3세부터 1806년 프란츠 2세까지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겸하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가로 부상

○ 16세기 막시밀리안 1세 이후 합스부르크가는 전쟁보다는 결혼을 통해 남부 독일 대부분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보헤미아와 헝가리, 스페인과 아메리카의 식민지 등의 영토 획득

※ 오스트리아의 결혼 정책은 “Bella gerant alii, tu felix Austria nube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헝가리 왕 마차시 1세가 남긴 말이라는 설이 있으나 출처는 불분명)

○ 1529년 및 1683년 터키(오스만투르크)의 침공이 있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어 유럽과 기독교 문명 수호

- 당시 종교개혁의 격동 속에서 유럽내 많은 이들이 개신교로 개종했으나,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2세(1576~1612)는 가톨릭을 지키면서 개신교를 박해

○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등 계속되는 몇 차례의 전쟁에도 불구, 오스트리아의 무역과 상업, 문화는 계속 번성

(2)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1740~1780)

○ 프랑스와 프로이센으로부터 계몽주의 정치를 수용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들 요제프 2세와 함께 40년간 오스트리아의 황금기를 이끌면서 오스트리아를 근대국가로 전환

- 중앙집권적 관료 체계 수립, 의무 공교육 도입, 사관 학교 설치, 공공 보건 위생제도 확립, 고문제도 폐지, 농노 해방과 종교 관용 정책 등 일련의 개혁정치를 통해 근대 행정의 바탕을 세웠으며, 귀족들의 특권 약화

(3) 오스트리아 제국(1804~1867)

○ 1792~1815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몇 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4년 자신을 황제로 자처하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제국으로 승격시키고 프란츠 1세로 즉위,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 해체

○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 이후,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제국의 후계자로서 오스트리아 및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하노버 등 35개 군주국과 4개 자유도시를 통합하여 독일연방 주도

○ 한편,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는 비엔나 회의(1814~1815)를 주재하며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등과 함께 유럽 질서를 나폴레옹 전쟁 이전의 보수주의 왕정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 그러나, 1848년 3월 혁명으로 자유주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헝가리, 밀라노, 베네치아, 프라하 등에서 계속적인 반란과 함께 反 합스부르크 운동이 전개

○ 1860년대 들어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프로이센과의 전쟁(1866) 패배*로 인한 국력 약화 및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계급(부르주아)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 개정과 입헌군주국으로의 전환에 동의

* 19세기 독일 통일운동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포함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독일주의(오스트리아 중심 독일어권 전체 통일)와 소독일주의(오스트리아 배제 프로이센 중심 통일) 세력간 대립 격화 →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발발, 오스트리아 패배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1918)

○ 1866년 프로이센에 패배한 오스트리아는 1867년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를 자치왕국으로 격상시키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출범

○ 1878년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행정권을 획득하여 1908년 편입

- 이는 세르비아 왕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사라예보 총격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

마. 제1공화국(1918~1938)

○ 제1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합스부르크 왕가는 종식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토중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17%만 남고, 나머지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으로 분할

○ 오스트리아는 농산물과 광물의 주공급지인 헝가리와 체코를 상실, 물자부족과 산업 부진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큰 타격

- 특히,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재정 위기 등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 내 국수주의적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으며, 나치가 독일을 통치한 이후 대독일 건설을 꿈꾸는 오스트리아 파시스트(Austro-Fascist) 세력 부상

○ 1927년 오스트리아 내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동년 7월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총격 발포 명령으로 80여명이 사망하는 사태 발생

- 1933년에는 기독교사회당 소속 돌푸스(Dollfuss)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집회 및 시위 금지, 신문검열제 등 반민주적 조치를 시행하자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1934년 2월 내전 발발

○ 동 내전에서 돌푸스 총리가 이끄는 세력은 사회민주당 세력에게 승리하였으나, 동년 6월 돌푸스 총리는 나치에게 암살

○ 이후 취임한 슈쉬닉(Schuschnigg) 총리는 독일과의 합병을 저지하고자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연합을 추진했으나, 1938.3.13. 히틀러의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진군함에 따라 독일에 편입

바. 연합국 분할 점령 및 제2공화국 출범

○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구소련 등 4개 연합국 군대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며, 1945년 사회민주당 출신 렌너(Karl Renner)를 대통령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

○ 제2공화국의 영토는 1938년 독일 합병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었으며, 헌법도 1920년 제1공화국 헌법으로 복귀

○ 오스트리아는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나, 당시 소련의 동구권 위성국가화에 반대하고, 미국의 마샬 계획을 포함한 서유럽 경제에 의존하면서 친서방 경향

○ 오랜 협상 끝에 1955.5.15. 연합국과 오스트리아간 주권회복을 위한 국가 조약 서명(동년 7.27. 동 조약 발효)

- 1955.10.26. 오스트리아 영구 중립을 규정한 제2공화국 헌법이 선포되었으며, 12월에는 유엔에 가입



PART II

정치/외교/국방

1. 정치 제도
2. 최근 국내 정세
3. 대외관계
4. 군사현황

1. 정치제도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9개 연방州로 구성된 공화국

※ 9개 연방州 : 비엔나(도시주), 부르겐란트, 슈타이어마르크, 케른튼, 티롤, 니더외스터라이히, 오버외스터라이히, 잘츠부르크, 포랄베르크

- 각 연방州 정부는 주지사, 부주지사, 주정부 각료들로 구성

※ 각 주별 州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연정 구성 후 간선으로 주지사 선출

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이나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도 일부 가미

- 국민투표, 국민발의 및 대통령 직선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포함

다. 국가원수 : 연방 대통령(Federal President)

○ 국민들의 직선(결선투표제)을 통해 선출(6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現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2017.1월 취임) 선출시 1차 투표(2016.4월)에서 5명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없자, 1위(극우성향 자유당 호퍼 후보)와 2위(무소속 판 데어 벨렌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2016.12월)를 실시, 약 52% 득표율로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이 당선

○ 선거권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만 16세 이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35세 이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보유

※ 과거 통치 가문의 일원이었거나 연속 두 번 대통령직을 기역임한 자는 입후보 불가

○ 대통령은 내각의 구성과 해임, 의회 해산권 등 전통적 의미의 의원내각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나, 그간의 관행상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만 수행

- 대통령은 임기 중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여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 1920년 처음 제정된 헌법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192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일부 강화

- 1929년 헌법 개정 당시 Wilhelm Miklas(빌헬름 미클라스) 대통령(기사당, 현 국민당의 전신)을 제외하고는 1986년까지 계속 대통령의 권한 자제를 지지하는 사민당 또는 무소속 대통령이 배출됨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 포기(Rollenverzicht)가 헌법적 관습으로 정착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

① **독자적 행사가 가능한 권한**

- 총리 임명 및 해임권 : 총선 결과에 따라 의회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연방 정부 구성 위촉
- 내각 전체 해임권 :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료 임명하며, 대통령 본인 의사에 따라 각료를 해임한 사례는 오스트리아 역사상 전무
- 법률의 서명 및 발효권 :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서명 거부 가능
  ※ 2008년 피셔 대통령이 무역법 개정안에 소급적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것이 유일한 사례
- 군 최고사령관 :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나, 군 지휘권은 국방장관이 행사하며, 선전포고는 의회가 결정하여 총리가 공포

② **연방정부, 총리 등의 제청에 의거하여 행사가 가능한 권한**

- 대외적 대표, 외교사절의 접수 및 파견, 국제조약 체결권 : 상징적 의미의 대표로서, 실제 외교정책은 내각에서 수립 및 집행(EU 정상회의도 총리가 참석)
- 긴급명령권, 하원 회의 소집권, 양원 합동회의 소집권, 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각료 임명 및 해임권, 법관 임명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라. 정부

(1) 개요

○ 2021.5월 현재 내각은 총리 외 부총리 1명, 장관 13명, 정무차관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부처 및 장관, 정무차관 직위 신설 및 구성 등은 연정 구성 정당간 합의에 따라 변동

○ 연방 대통령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 권한은 총리가 수장인 연방 정부(총리, 부총리, 연방 장관 등으로 구성)가 행사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 행정 권한이 내각에 귀속

(2) 연방 총리(Federal Chancellor)

가) 헌법상 총리의 지위

○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내각을 통괄하며, 내각 구성원 중 제1인자(the first among equals)로 각료회의를 주재

○ 연방 대통령과 함께 총리, 장관 모두 최상급 집행기관이며, 내각은 전원합의제로 운영

○ 헌법상 총리가 각료에게 직접적 지시를 하달할 권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집권 정당의 수장으로서 행정조정과 감독기능 수행

※ 각료 임면권 및 정당 내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내각 통솔 가능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주요 권한

- 총리가 수장인 내각은 연방 대통령의 권한 외 모든 행정 업무의 최고 책임 기관
- 각료회의 주재
- 법안 상정 주도 등 입법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각료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권한
- 연방 대통령의 모든 공식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청권
- 20일 미만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20일 이상 유고시는 하원 의장단이 대행)
-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시 양원 합동회의 소집권

나) 총리의 선출 및 해임 절차

○ 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하원의 승인 필요

○ 대통령은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당수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 헌법상 대통령이 다수당 대표 외 인사 지명도 가능하나, 정치관례상 불허용

○ 정부 구성을 위임받은 제1당 당수는 단독 정부 혹은 다른 정당과의 연정 구성을 통해 각료를 인선하여 대통령의 추인을 받는 것이 관행

(3) 연방 정부 구성(현 정부 부처 및 각료 명단, 2021.5월 현재)

※ 현 정부는 국민당-녹색당 연정으로 구성(2020.1월 출범)

소속	직위	성명
국민당	연방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재무 장관	게르놋 블뤼멜(Gernot Blümel)
	총리실 EU·헌법 장관	카롤리네 에트슈타틀러(女) (Karoline Edtstadler)
	교육·과학·연구 장관	하인츠 파스만(Heinz Fassmann)
	관광·농업·지방 장관	엘리자베트 쾨스팅어(女) (Elisabeth Köstinger)
	내무 장관	칼 네함머(Karl Nehammer)
	총리실 여성·가족·청소년·통합 장관	주잔네 랍(女)(Susanne Raab)
	외교장관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Alexander Schallenberg)
	경제·디지털 장관	마가레테 슈람뵉(女) (Margarete Schramböck)
	국방 장관	클라우디아 탄너(女)(Klaudia Tanner)
	기후·환경·에너지·교통·혁신·기술 정무차관	마그누스 브룬너(Magnus Brunner)
녹색당	부총리 겸 예술·문화·체육·공공서비스 장관	베르너 코글러(Werner Kogler)
	기후·환경·에너지·교통·혁신·기술 장관	레오노르 게베슬러(女) (Leonore Gewessler)
	법무 장관	알마 차딕(女)(Alma Zadi)
	예술·문화·체육·공공서비스 정무 차관	안드레아 마이어(女)(Andrea Mayer)
무소속	노동 장관	마틴 코허(Martin Kocher) ※ 2021.1월 임명
	사회·보건·복지·소비자보호 장관	볼프강 뮉슈타인(Wolfgang Mückstein) ※ 2021.4월 임명

마. 의회

(1) 개요

○ 상원·하원 양원제

○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이 우월하며 내각 불신임권과 국정조사권 등은 하원이 보유

(2) 상원(Bundesrat : The Federal Council)

가) 구성 : 61명(9개 연방 州 대표로 구성)

○ 각 州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상원 의장은 6개월마다 주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수임

※ 인구 비례에 따른 州별 상원 의석 배분 현황 : △비엔나(11석), △부르겐란트(3석), △슈타이어마르크(9석), △케른튼(4석), △티롤(5석), △니더외스터라이히(12석), △오버외스터라이히(10석), △잘츠부르크(4석), △포랄베르크(3석)

○ 외교, 노동사회, 인권, EU, 보건, 국방, 경제 등 25개 산하 위원회 구성

나) 선거 방법 : 각 州 의회에서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간선으로 선출

다) 임기 : 5년 ※ 오버외스터라이히州는 6년

라) 권한 : △법안 제출권, △입법 거부권(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성격의 거부권으로 하원에서 재의결시 동 거부권 실효), △국정 감사권

(3) 하원(Nationalrat : The National Council)

가) 구성 : 183명(인구 비례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

○ 2019.9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 제1당은 국민당, 제2당은 사민당

※ 다만, 2020.1월 출범한 쿠르츠 2기 내각은 국민당-녹색당간 연정 구성

※ 2019.9.29. 총선 결과 / 2021.5월 현재 정당별 하원 의석 분포 : △중도우파 국민당 71석(37.5%), △중도좌파 사민당 40석(21.2%), △극우 자유당 31석(16.2%), △진보성향 녹색당 26석(13.9%), △NEOs 15석(8.1%)

○ △제1의장, 제2의장, 제3의장이 있으며, △각 의장은 하원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나, 관례적으로 제1의장은 다수당, 제2의장은 제2당이 수임

※ 2021.5월 현재 의장 수임 현황 : △제1의장(국민당 Wolfgang Sobotka), △제2의장(사민당 Doris Bures), △제3의장(자유당 Norbert Hofer)

○ 산하 외교, 예산, 금융, 문화, 관광, 사법, 환경 등 총 40개 위원회 구성

나) 임기 : 5년

다) 선거방식 : 국민 직선/ 비례대표제

○ 선거권은 만 16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적자(선거일 기준)

○ △지역 선거구(전국적으로 39개 선거구로 구성), △9개 연방 州 선거구, △전국 단위 선거구로 나누어 각 정당에서 각 선거구별 후보 명단을 선거일 48일 전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

※ 선거구별 의석 수

연방 주(州)	연방 州별 지역선거구 수	각 지역선거구별 의석 수	州 선거구 총 의석수
부르겐란트	2	4+3	7
케른텐	4	3+3+3+4	13
니더외스터라이히	7	7+5+6+5+5+5+4	37
오버외스터라이히	5	7+5+8+6+6	32
잘츠부르크	3	3+4+4	11
슈타이어마르크	4	9+6+4+8	27
티롤	5	2+5+4+3+1	15
포랄베르크	2	4+4	8
비엔나	7	3+3+3+7+6+5+6	33
합 계	39	183	183

○ 유권자는 △정당에 대한 투표,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 투표* 시행

* 개인 선호투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희망시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 소속의 지역, 연방州, 전국 단위 선거구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 병행/ 후보자가 정당 명부 순서와 관계없이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

○ 정당별 의석 배분은 지역, 연방州, 전국 단위 순으로 총 세 번의 절차를 거쳐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 배분

※ 정당별 의석 배분 절차

- 1단계로 지역 선거구 의석 배분 및 지역 단위에서 최소 하나의 의석을 확보하였거나 4% 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연방 州 선거구 의석을 배분
- 2단계로 총 183석 중 州 선거구에서 배분하지 못한 잔여 의석수를 전국 단위에서 배분(전국 단위 정당 득표가 4% 이상인 정당에 한하여 의석 배정)
- 마지막으로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서는 하위를 차지하였더라도 개인별 선호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의 정당 명단 순위 조정 順으로 의석 배분

라) 권한

○ 내각 불신임권(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내각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한 불신임 의결 가능)

○ 자체 해산권(하원은 자체 해산 결의가 가능하며, 그간 동 권리에 따라 조기 총선 실시)

○ 기타 △조약 체결 및 주요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예산 확정권, 국정 감사권 및 국정 조사권, △입법권 및 헌법개정안 의결권 등

(4) 의회주의 보완(직접 민주제적 요소)

○ 국민발의권 : 유권자 10만명의 발의로 하원에 법률안 제출 가능

○ 국민소환권 : 하원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대통령 탄핵 가능

○ 국민투표권 : 하원이 의결시 하원을 통과한 주요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확정 가능

※ 헌법개정안 확정도 국민투표에 의거

바. 정당

(1) 개요

○ 1920년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197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법적 지위, 기능 및 재정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하원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다당제 출현

(2) 주요 정당

가) 국민당(Österreichische Volkspartei, ÖVP)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 사회당에서 발전한 보수성향의 기독교 정당 / 현재 교회와 직접적인 유대관계는 없고 농민, 상인, 일부 화이트칼라 계층이 주된 지지 기반

○ △1945년 창당,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단독 집권, △1986년 이후 사민당과 대연정 구성 집권, △2000.2월 이후 자유당과 연정 구성, △2005년 이후 자유당에서 분리된 미래연합과 연정 구성

○ 2007년 이후 사민당과의 대연정에 다시 참여하였으나, 연정 내 갈등으로 2017.5월 Reinhold Mitterlehner(라인홀트 미터레너) 부총리(국민당 대표)가 부총리직과 국민당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대연정 종료

○ 2017.10월 총선에 승리하여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2019.5월 자유당과의 연정 종료

○ 2019.9월 조기총선 이후에는 녹색당과 연정 구성 중

나) 녹색당(Grüne)

○ 유럽 여타 국가의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 훼손방지를 목적으로 창당

○ Zwentendorf에 건설된 오스트리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는데 성공(1978년)한 후 1986년 선거부터 의회에 진출

○ 2017년 총선에서는 의석 배분 기준선인 4% 득표 미달로 하원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2019.9월 조기 총선시 26석 확보 및 국민당과 연정 구성

다)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 SPÖ)

○ 주요 지지 기반은 노동자 및 일부 화이트 칼라 계층이며,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서 강세

○ △1945년부터 1966년까지 국민당-사민당간의 대연정(제1기) 참여, △1970년부터 1983년까지 단독집권, △1983년 이후 자유당과 소연정 구성 집권, △1986년부터 2000년 2월까지(제2기) / 2007년부터 2017년까지(제3기) 국민당과 대연정을 구성, 집권

라)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

○ 1949년에 설립된 자유연합(Verband der Unabhängigen : VdU)에 기반하여, 反마르크스주의를 기치로 1956년 창당

○ 냉전 종식이후 동구권 개방 및 EU 가입으로 인한 소외계층 증대, 동유럽권 출신 이주민 및 난민 유입 증가에 대한 일부 계층의 반감을 이용, 극우적 색채가 강한 정당으로 발전

○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사회당과 연정 구성, △2000년부터 2005년, 2017월부터 2019.5월까지 국민당과 연정 구성

마) 새로운 오스트리아당(Das Neue Österreich und Liberales Forum, NEOs)

○ 좌우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노선을 표방하며 2012년 창당

○ △경제적으로는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와 복지 축소, 시장 자유화 및 기업 규제 해제, △사회적으로는 동성애 등 소수자 권리 및 여성 지위 강화 등 이원적 정책 표방

○ 2013년부터 하원에 진출 하였으며 2019.9월 조기총선에서는 15석 차지

사. 사법제도

(1) 개요

○ 오스트리아는 헌법상 연방국가로 되어 있으나, 사법권은 연방 법원에 속하고 각 연방주에는 사법 권한 미분배

○ 헌법상 사법기관으로는 일반 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있으며, 대법원이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일반 법원 중 최고법원

○ 사법의 영역을 크게 민·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으로 나누고 각각의 독립된 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점이 사법제도의 특색

(2) 대법원

○ 민사, 형사사건에 관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 인사위원회의 제안 및 연방 정부의 제청을 거쳐 연방 대통령이 임명

(3) 하급법원

가) 고등법원

○ 비엔나, 그라츠, 린츠, 인스부르크 등 4개 지역에 설치

○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

나) 지방법원

○ 전국에 20개의 지방법원 설치

○ 모든 노동·사회사건과 구법원(district court)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하며, 구법원에서의 상소사건에 대한 제2심 역할 수행

다) 구법원(district court, Bezirksgericht)

- 전국에 116개의 구법원이 설치
- 민사의 경우 소가(訴價) 1만5천 유로 이하의 사건을 관할하되, 가사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사건을 담당
- 1만 5천 유로 이하의 사건 중에서도 상사 사건의 경우 별도의 상사 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사 구법원이 관할
-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경죄 중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인 사건을 관할

라) 행정법원

- 행정청 등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원 사건 및 행정청 등의 처분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소원 사건 등을 관할

마) 헌법재판소

- 소장 1인, 부소장 1인, 재판관 12인과 예비재판관 6인으로 구성
- 상설 심리 기관은 아니며, 1년에 4차례 3주 정도만 심리 진행
- △법률의 위헌 여부 등 심사,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 등 심사, △국가기관들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 △연방대통령 및 하원, 상원의원에 대한 선거재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구성원 등에 대한 탄핵재판,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나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하여 처리될 수 없는 성격의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재판, △행정 처분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행정재판 등이 관장 사항

2. 최근 국내 정세

가. 개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ÖVP, 중도우파)과 사민당(SPÖ, 중도좌파)이 단독 집권 또는 대연정을 통해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 대연정 역사 : △제1기(1945~1966, 국민당 주도) 국가 재건, △제2기(1986~2000, 사민당 주도) EU 가입(1995), △제3기(2007~2017, 사민당 주도) 조세 제도 및 선거법 개혁 등 국내 제도 정비

- 2015년 이후 유럽에 대량 유입된 난민문제 대처 미흡, 연정 내 갈등 고조, 우파 포퓰리즘 득세로 2017년 사민당-국민당간 제3기 대연정 종료

○ 2017.10월 실시된 총선에서 쿠르츠 외교장관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국민당이 1위를 차지

※ 총선 결과(총 183석) : 국민당 62석, 사민당 52석, 자유당 51석, NEOs 10석, Pilz당 8석

- 제1당 국민당이 정책적 유사성이 높은 극우 성향 자유당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함에 따라 자유당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당과의 연정 참여
- 연정 내 자유당 인사들의 극우적 돌출 발언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쿠르츠 총리가 친EU 노선을 견지하면서 보수적이나 극단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나가던 중 2019.5월 슈트라헤 부총리(자유당)의 부패 스캔들 동영상 공개로 쿠르츠 총리는 국민당-자유당간 연정 종료 선언

※ 이비자(Ibiza) 동영상 사건 : 2017.7월 슈트라헤 부총리(당시 자유당 대표)가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러시아 신흥재벌의 조카로 소개된 러시아 여성에게 자유당에 재정적 후원시 대가로 정부 인프라 사업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부총리 사퇴

- 사민당은 쿠르츠 총리 포함, 내각 전원에 대한 의회 불신임안을 상정, 자유당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불신임안 가결(오스트리아 헌정사상 최초)

○ 2019.9.29.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쿠르츠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2위 사민당과 큰 격차로 제1당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 기반 확보

※ 총선 결과(총 183석) : 국민당 71석, 사민당 40석, 자유당 31석, 녹색당 26석, NEOs 15석

- 제2기 쿠르츠 정부는 1기의 보수적 난민·이민자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국민당-녹색당간 연정 출범(2020.1.7.)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분야 선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

※ 쿠르츠 제2기 내각은 △국민당의 국경수호 세제감면 정책, △녹색당의 환경정책 중점 추진 중

- △국민당이 내무, EU, 외교, 국민통합 국방 장관직을 맡고, 환경보호가 최우선인 녹색당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를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대규모 부처로 승격, 개편(현재 총리, 부총리 1명, 장관 13명, 정무차관 2명 등 총17명으로 내각 구성)

나. 최근 동향

○ 2020.1월 출범한 쿠르츠 제2기 내각은 쿠르츠 총리에 대한 공고한 대중적 지지와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징인 합의와 포용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중

- 연정 출범 초기 △국민당의 보수적 난민 정책, 세제감면 등 경제 중심 정책 기조와 △녹색당의 기후변화, 친환경 중심의 정책 기조간 조화 여부가 성공적 연정 운영의 관건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정 내 특별한 잡음 없이 협업 관계 유지중

○ 제2기 쿠르츠 정부는 2020.3월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EU 국가 중 가장 먼저 상점 영업 중단, 재택근무 전면 도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경 전면 봉쇄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상황 관리

- 2020.10월부터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한 전면적 봉쇄 조치를 시작한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2020.11월 중순에서야 야간 외출 제한 등 부분적 봉쇄 조치를 재시행하는 등 봉쇄로 인한 경제적 영향 최소화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2020.12월말 오스트리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및 2021.2월부터는 대규모 검사와 FFP2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적극 시행하면서, 9개 연방 州별로 감염 상황에 맞는 봉쇄 조치 실시 중

○ 제2기 쿠르츠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안정적 국정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1년 중에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 및 실업 극복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생 안정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

- 아울러, 美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협력, △기후변화, △이란 핵(JCPOA) 문제 협력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배가

3. 대외관계

가. 대외정책 기조

○ 1955.5.15. 4대 연합국(미·영·프·소련)과 오스트리아간 주권회복을 위한 국가조약* 체결을 통해 외교정책 기조로 중립주의를 채택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연합국의 분할 점령을 종료하고, 오스트리아의 주권을 회복시키기로 합의

- 향후 △군사동맹 가입 금지, △외국군의 자국 영토 주둔 금지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NATO에도 미가입

※ 오스트리아는 NATO 미가입국이나,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 20개 회원국 중 하나이자, △유럽, 대서양 동반자관계(EAPC,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50개 회원국(30개 NATO 회원국+20개 PfP 회원국) 중 하나로서 NATO와 협력 중

○ 1995년 EU 가입 이후 독자적 외교노선보다는 EU의 공동외교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중점

-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분배, △난민 및 국경 문제 등을 두고 오스트리아의 국익을 우선하는 경향도 감지

※ 최근 오스트리아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사례

- 2020년 EU 경제회복기금(약 7,500억 유로)을 보조금 형식으로 조성하는 데 반대하는 '검소한 4개국(Frugal Four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 참여
- 2021.3월 EU내 공정한 백신 분배를 촉구하는 6개국(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간 이른바 '백신동맹(vaccine alliance)'형성

나. 주요 국가와의 관계

(1) EU / 유럽

○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온 오스트리아는 1995년 EU 가입 이후 EU의 공동 외교 정책을 이행하는데 중점

※ 총리실 산하에 EU·헌법 장관을 두고 대EU 정책을 총리가 직접 관장

- 2018년 하반기 EU 의장국(1998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이어 3번째) 수임시에도 총리실 산하에 EU 담당장관을 두고 쿠르츠 총리가 EU 의장국 활동을 직접 지휘

- 다만, 現 쿠르츠 정부는 △공동국경 보호, 난민 문제 등 외교안보분야에서는 EU 통합,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EU 각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

○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오랜 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도 밀접한 8개 접경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 및 △서발칸 지역**의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표방

* 접경국 및 국경 길이 : 독일(801km), 체코(402km), 슬로바키아(105km), 헝가리(321km), 슬로베니아(299km), 이탈리아(404km), 리히텐슈타인(34km), 스위스(158km)

**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 8개 접경국가와의 교역이 오스트리아 전체 교역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 국가들의 안정을 국익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

※ △독일과는 난민 수용, 코로나19 상황 下 국경 통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나, 오스트리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이 주도하는 가치기반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 입장,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국가들과는 오스트리아 주도로 별도의 "Central 5 외교장관 회의"를 출범(2020)시키는 등 독자적 협력 강화, △이탈리아, 스위스와도 원만한 관계 유지 중

- 서발칸 지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만큼, 동 국가들의 EU 가입 등 EU-서발칸 협력 진전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며, 서부 발칸 지역이 동부로부터의 난민 유입 경로에 해당되는 만큼, 난민 통제를 위한 동 국가들과의 협조체제 유지에도 지속적 노력 경주 중

(2) 미국

○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을 표방하면서도 친서방 노선을 견지해 왔으며, 특히 미국의 마샬플랜이 자국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인식하 미국과는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중(1838년 수교)

- 2019년 기준 독일, 이탈리아에 이은 오스트리아의 3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식
- NATO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을 통해 유럽-미국간 안보협력에도 참여 중

○ 트럼프 행정부와는 △2019.2월 쿠르츠 총리 방미, △2020.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 등을 통해 협력 관계 발전 도모

※ 2020.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오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양국 시민사회간 대화 채널(U.S.-Austria Civil Society Dialogue) 개설 합의, △양국민간 인적교류 활성화, △양국간 투자 협력 및 군사교류 확대 필요성에 합의

○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로는 미-EU간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대서양 파트너십 복원 및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이란 핵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 협조 모색

※ 샬렌베르크 외교장관과 美 블링컨 국무장관간 통화시에도 미국-오스트리아간 전략적 파트너십 재활성화, 미국-EU간 대서양 파트너십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서발칸 지역 안정 도모 필요성 등 재확인(2021.4.20.)

(3) 러시아

○ 에너지 협력, 서발칸 지역 안정 확보 등을 위해 러시아와 전통적 협력 관계 유지 중

※ 오스트리아 전체 석유 수입 물량의 약 56% 및 천연가스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2040년까지 오스트리아-러시아간 가스 공급 계약 체결) /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 개설 사업인 Nord Stream 2에 오스트리아 석유회사 OMV 참여 중

- 쿠르츠 총리는 2017년 취임 이후 EU 역외 국가 중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2018.2월)
-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재선 이후 오스트리아-소련간 가스 공급 50주년을 기념하여 비엔나 국빈 방문(2018.6월)

※ 푸틴 대통령은 2018.8월 크나이슬 당시 오스트리아 외교장관(女)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오스트리아와는 공적·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대러 제재는 EU 정책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EU의 대러 제재 완화를 기대하는 입장

- 2021.2월 러시아 야권인사 나발니 구금 사건 관련, EU와 동일하게 무조건적 석방 및 법치주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대외 메시지 발표(쿠르츠 총리 및 샬렌베르크 외교장관)
- 2018.3월 영국 내 러시아 망명 스파이 암살사건 계기 대러 제재에는 불참
- 2018.11월 오스트리아 퇴역 장교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는 비엔나 주재 러시아 대사 초치 등 강경 입장 표명
- 2020.8월 오스트리아가 비엔나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한데 대해 러시아도 자국 주재 오스트리아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오스트리아-러시아 관계에 미묘한 입장 변화도 관찰

(4) 아시아

○ 오스트리아는 EU 및 발칸, 지중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 중

※ 아시아 중시 정책(Asia Focus)의 일환으로 △2018.4월 쿠르츠 총리 및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중국-오스트리아간 우호·전략 동반협력 관계 격상, 일대일로 협력 MOU 체결 등), △2019.2월 쿠르츠 총리의 한국, 일본 방문

- (중국)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유럽적 가치에 반하는 체제 라이벌이라는 인식하 경제 중심 협력 관계 발전중

※ 2021년 오스트리아-중국 수교 50주년 계기 샬렌베르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간 통화시 △양국간 코로나 백신 협력(유럽의약품청(EMA) 승인 후 오스트리아 내 접종 가능 입장), △일대일로 협력 강화, △수교기념 공동 행사 개최 등 협의(2021.3.9.)

-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오랜 외교관계(2019년 수교 150주년)를 갖고 있으며, EU를 통한 협력* 위주로 관계 발전 지속중

* 일본-EU 전략적 동반자협정(SPA) 및 경제동반자 협정(EAP) 기체결

※ 일본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교류 협력을 통해 오스트리아 문화·예술계내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

4. 군사 현황

가. 개요

○ 냉전 종식 이후 1980년대 중반 GDP 대비 1.3% 수준이었던 국방비가 2020년에는 GDP 대비 0.678%(25억 4천만 유로)로 감소

-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접촉자 추적, 선별진료소 현장지휘, 육로 국경통제, 치안 유지 등에 군 병력 등이 투입되면서, 2021년 국방예산은 기존 계획된 24억 6천만 유로에서 약 2억 유로(+8.3%) 증가한 26억 7천만 유로(GDP 대비 0.687%)로 책정

○ 오스트리아 군은 UN, EU, NATO 등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재난 복구 책임도 담당

* 2021.1월 기준, 코소보, 레바논, 아프간, 서부사하라 등 총 12개국에 875명 파견 중

나. 군사력 현황

○ 총 병력 : 현역 47,000명

- △육군·공군·특수부대 14,000명, △사회복무요원 8,000명, △민병 25,000명

※ 내륙국가로서 해군 미보유

○ 병역 의무자 : 연간 18,000명(의무 복무 기간 6개월)

- 2006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2013.1월 의무병 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 부결(반대 59.7%, 찬성 40.3%)

※ 현역 부적절 판정 사례 증가 및 남아 출생률 감소, 병역 대체 근무 선택 비율 증가 등으로 현역 입영자 비율이 1998년 49%에서 2018년 19%로 대폭 감소

○ 민병(Miliz) 제도 : 기본 병역 및 교육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제도(한국의 예비군과 유사)

2021 오스트리아 개황 · AUSTRIA



PART III

경제/통상/개발

1. 주요특징

2. 산업분야별 현황

3. 에너지

4. 과학기술

5. 대외무역

6. 공적 개발원조

7. 최근 경제동향

1. 주요특징

가. 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 1960년대부터 서비스 분야가 지속 성장, 2019년에는 3차 산업이 국가 총 부가가치의 70%를 창출

- 총 경제인구의 약 74%가 3차 산업에 종사

〈산업별 GDP내 비중(단위 %)〉

	2017	2018	2019
1차 산업(농/임업)	1.2	1.3	1.2
2차 산업(광업/제조업, 건설업 등)	28.4	28.5	28.6
3차 산업(유통, 서비스, 교육 등)	70.4	70.2	70.2

출처 : Statistics Austria, WKO

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강국

○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6%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약 200만명(66%), 매출규모는 4,820억 유로(60%)로 오스트리아 경제의 중추적 역할

* 중소기업 : 고용인수 250명, 연 매출 500백만 유로 이하

○ 오스트리아는 116개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1,307개), △미국(366개), △일본(220개), △스위스(131개)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

*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는 갖춘 강소 기업을 지칭

다. 기계·설비 등 투자재 산업의 발달

○ 내수 시장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높아 소비재·가전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작은 반면, 철강·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의 비중이 크며, 동 분야에서 경쟁력 보유

- Magna Steyr(자동차), Voestalpine(철강), Andritz(기계), Palfinger(건설기계) 등 우수 제조기업 보유/ 반면, 전체 수입의 약 50%가 소비재일 정도로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편 (한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체의 약 10~15%)

○ 자동차, 환경,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별로 오스트리아 전역에 총 60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7천여 개의 기업들이 동 클러스터에 소속

라. 대외지향적 경제 구조

○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세계 시장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출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기계·의약품 / 여행·건축·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쟁력 보유

○ 동서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동유럽에서 값싼 중간재를 수입하여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생산, 이를 독일 등 서유럽 글로벌 기업에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 확립

-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5%로 유럽연합(EU) 평균 46%, 한국 44% 상회/ 이웃나라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독일과의 무역 비중은 30% 수준



동서유럽의 교차로 오스트리아

마. 국영기업의 민영화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의 상당수가 국영 기업이거나 정부가 대주주

- 1980년대 중반부터 비대한 경영구조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실책의 누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정치 문제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꾸준히 진행 중

※ 오스트리아 기업 국유화의 역사적 배경

- 과거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점령시 상당수의 유태계 기업이 나치에게 몰수되어 친나치 기업인에게 증여되거나 국유화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구성된 오스트리아의 국민당/사민당 임시정부는 소련이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나치 독일계 기업 시설을 몰수할 가능성에 대비, 나치 독일계 대기업을 국유화

2. 산업 분야별 현황

가. 1차 산업

(1) 현황

○ 국가 총부가가치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는 11%였으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속 감소하여 2019년에는 1.3% 수준으로 하락

- 농림업 종사 가계수는 지속 감소/ 가계당 평균 재배 면적은 증가

〈 1차 산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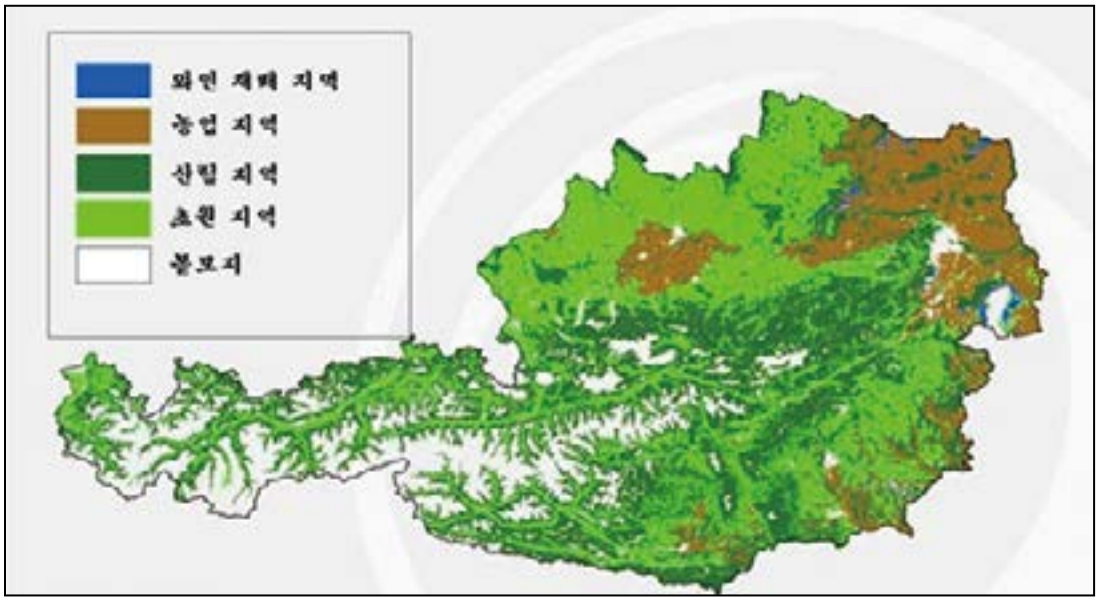
	1999	2010	2016
가계 수	217,508	173,317	161,155
가계당 평균 재배 면적(ha)	34.9	42.6	45.7
종사자 수	575,091	413,755	410,890

* 출처 : Statistics Austria, Farm Structure Survey(FSS) 2016(FSS 2020은 2022년 발간 예정)

(2) 농업

○ 국토의 약 34.33%(약 287만 ha)가 농지

- 니더외스터라이히州, 부르겐란트州, 슈타이어마르크州, 오버외스터라이히州 등이 주요 경작지



* 출처 : HBLFA, Landwirtschaftliche Nutzung in Österreich

○ 주요 산출품은 밀, 옥수수, 보리 등이며, 과일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을 거의 자급자족

- 2019년 기준 24,235개의 유기농 농장(총 국내 농장 중 22.2%)이 있으며, 유기농 농장은 계속 증가 추세(출처 : Bio-Austria)
- 주요 수출국은 독일(약 30억 유로, 총 농업 제품의 1/3을 차지), 이탈리아(약 12억 유로) / 이외 미국, 헝가리, 스위스, 슬로베니아 등으로의 수출량 증가 추세

(3) 임업

○ 국토 면적의 약 47%(386만 ha)가 산림

- 주로 슈타이어마르크(면적당 61.4% 산림분포)와 케른튼(면적당 61.2% 산림분포) 지역에 분포

○ 약 30만 명이 임업에 종사 중이며, 매년 약 120억 유로의 생산 가치(오스트리아 전체 GDP 중 4%)를 창출

○ 2019년 목재 산업 총 생산액은 82억, 수출비중은 72%이며, 이중 약 77%가 EU 지역으로 수출(출처 : Association of the Austrian Wood Industries 2019/2020 Industry report)

나. 2차 산업

(1) 현황

○ 2019년 기준, 2차 산업 분야의 GDP 기여도는 약 29% 수준이며, 67,023개의 기업이 약 100만명 고용 중

〈2차 산업 현황 (2019년 기준)〉

	기업 수	종사자 수(명)	매출액 (백만 유로)
채광 · 채석	324	6,370	2,167
제조업	25,262	665,072	205,809
전기, 가스 등	2,407	29,318	46,917
물 공급, 하수도 등	2,159	21,786	6,222
건설	36,871	315,078	53,892
총 계	67,023	1,037,624	315,007

* 출처 : Statistics Austria,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19

(2) 주요 제조업

○ 제조업은 전후 오스트리아 경제복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자체 시장규모가 작고 인건비 수준이 높아 소비재, 가전 등 경공업 분야 비중은 낮지만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 분야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 보유
- 마그나 슈타이어/Magna Steyr(자동차),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철강), 안드리츠/Andritz(기계), 팔핑거/Palfinger(건설기계) 등 우수 제조기업 보유

○ △수도 비엔나와 인근의 비너노이슈타트, 레오벤, 그라츠, 린츠, △서부의 인스부르크, 쿠프슈타인 지역, △포랄베르크州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주요 산업단지가 형성

- △동부 지역에는 주로 기계공업, 화학공업 및 전기·전자 제품, △서부 지역에는 주로 섬유 및 유리 공업이 발달

○ (자동차) 완성차의 생산 · 조립 보다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수출

- 오스트리아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9년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 규모(국내 생산 기준)는 약 185억 유로로, 그 중 수출이 86%를 차지

  ※ 완성차를 연 15만대 규모로 소량 생산 중으로, Mercedes Benz, BMW 등의 차량을 Magna Steyr 社 그라츠 공장에서 위탁 생산

- 정부의 적극적 보조금 및 면세 정책으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동 분야 기술 혁신이 꾸준히 진행중

  ※ 2020년 오스트리아내 전기차 신규 판매 대수가 2019년 대비 72.8% 성장 (총 15,972대 판매/ Bundesverband Elektromolbilitaet Österreich, BEO)

○ (철강/금속) 전 세계 용광로의 70% 이상이 오스트리아의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가 개발한 산소 전로 공법을 사용하는 등 철강·금속 분야 선진국

* 한국의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 최초로 제철 기술(Corex 공법)을 이전해준 업체로, 산소 전로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세계적 철강 업체로 평가

-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내부 수요가 큰 것이 특징

○ (섬유/패션) 1990년대 후반부터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 기지 이전으로 업체 수 및 고용 규모가 감소 추세이나, 자동차, 항공기, 의료 산업 등에 사용되는 하이테크 제품인 기술섬유(technical textile) 개발을 통해 활로 모색 중

- 2019년 전체 섬유산업 규모 4.8억 유로 중 기술섬유가 1.8억 유로 차지
- 2019년 기준 오스트리아 전체 섬유·패션 시장규모는 생산액 기준 24억 유로, 관련 업체 수 224개, 고용규모 1만 1,000명 수준

○ (일반 기계)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기업을 보유 중

- 2018년 기준 기계 산업 분야 기업의 수는 약 1,359개, 동 분야 종사 인구는 11만명
- 사출 성형 기계(injection molding machine)를 제조하는 엥겔 오스트리아(Engel Austria)가 대표적 기업이며, 동 기업은 독일, 체코, 미국, 중국, 한국(평택) 등에 지점 운영 중

○ (화학) 합성품 및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2019년 기준 약 307개의 기업이 48,621명 고용 중

- 동 분야 오스트리아 대표 기업은 보레알리스(Borealis)* 등

  * 비엔나에 본부를 둔 석유화학 기업으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생산 분야에서 유럽 2위, 세계 8위 업체로서, 2019년 기준 직원 수는 6900명, 전세계 81억 유로의 매출 실적/ 2018.11월 국내 전선기업 DYM솔루션 인수(49백만불)

○ (고무/플라스틱) 19세기 초부터 고무·플라스틱 제조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오버외스터라이히州와 니더외스터라이히州에 대부분의 기업이 집중

- 2019년 기준, 약 570개의 기업이 30,500명 고용(출처 : Unicredit Bank Austria Economics & Market Analysis Austria 분야별 보고)

다. 3차 산업

(1) 현황

○ 국가 총부가가치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약 42%였으나, 지속 증가하여 2019년 기준 GDP 기여도는 약 70%로 상승

○ 2019년 기준 3차 산업 분야에 274,079개의 기업이 영업 중(오스트리아 전체 기업 수의 약 80%에 해당)

- 3차 산업 종사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중소규모 기업에 해당(기업당 종사자 수가 평균 7명)

〈3차 산업 현황 (2019년 기준)〉

	기업 수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 유로)
유통 및 무역	80,029	679,366	271,387
운수	14,995	214,036	48,046
숙박, 요식 등	48,015	317,081	22,124
정보, 통신	21,383	122,374	26,804
부동산	19,419	53,900	20,736
법률, 과학, 기술	71,516	272,274	38,346
행정, 보조	17,202	260,000	26,881
기타	1,520	3,859	331
총 계	274,079	1,922,890	454,655

* 출처 : Statistics Austria,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19(잠정)

(2) 관광업

○ 스키·산악·호수·도시 관광 등 관광 자원 풍부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오스트리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90만명(전 세계 국가 중 11위)

- 2019년 기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Tirol州, Salzburg州, 비엔나시 順/ 관광객 국적은 독일(약50%), 오스트리아(26%), 네덜란드(7%) 順



호프부르크 왕궁



슈테판 대성당



쇤브룬 궁전



벨베데레 궁전

○ 2019년 기준, 직접 및 간접 가치 창출을 총괄한 관광 수입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7.3% 차지

- 2019년 오스트리아 내 여행객의 숙박 건수는 약 1.53억 건

※ 2020.3월~2021.3월 코로나19 기간 동안 숙박 건수는 9.8백만건으로 크게 감소

〈관광 분야 수익 및 GDP내 비율〉

	2011년	2016년	2019년
수익 (백만 유로)	23,024	25,948	28,345
GDP내 비율(%)	7.4	7.3	7.3
숙박 건수(건)	1.26억	1.41억	1.53억

* 출처 : Statistics Austria, WIFO

○ 2019년 기준 △숙박 및 요식업 종사자는 317,081명, △68,000개 숙박업소 운영 중

3. 에너지

(1) 현황

○ 2019년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공급은 총 32,833Ktoe*

* 석유환산킬로톤(Ktoe) : 석유 1,000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 에너지 공급 구조상으로는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증가 추세

〈오스트리아 총 에너지 공급(Total Energy Supply) 국제 비교(단위 : Ktoe)〉

	1995년	2005년	2015년	2019년
오스트리아	27,028	33,379	31,891	32,833
- 석탄	13%	12%	10%	9%
- 천연가스	24%	24%	22%	23%
- 석유	41%	41%	36%	36%
- 수력	12%	10%	10%	11%
- 풍력, 태양광 등	0%	1%	2%	3%
- 바이오 에너지	11%	12%	21%	19%
한국	144,753	210,278	272,616	279,871
EU*	1,645,516	1,794,005	1,587,826	1,599,761

* 출처 : IEA World Energy Balance 2020(EU 28개국 통계의 경우 2018년 수치)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유럽 평균(60%, 2018년 기준)보다 높은 75% 수준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효율적 에너지 정책 중점 추진 중

○ 총 에너지 공급 및 총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측면에서 EU 회원국 내 상위권 유지

- 2019년 기준 △총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0%로 역내 5위* (EU 평균 14.3%),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80%**로 1위

  * 라트비아 41.4% 스웨덴 40.8%, 덴마크 36.9%, 핀란드 34.1% 順

  ** 수력 60%, 풍력 10% 바이오에너지 6% 태양광 2.3% 화석연료 20% 등

(2) 에너지 자원 정책

가) 기후·에너지 통합전략

○ 국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오스트리아의 기후·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기대

- 기후·에너지 통합전략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세부 목표로 하여 △교통 △건축 △금융 △R&D 등을 아우르는 12개의 프로젝트와 부문별 감축방안 제시

〈오스트리아 탄소 중립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방안〉

목표		- (2030) 2005년 대비 Non-ETS GHG 배출 -36% 감축 - (2040) 기후 중립
부문별 감축 방안	신재생 에너지/ 전력	- 총에너지 공급량(TPES)의 46-5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2030) - 국내 전력 소비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2030) - 수소 및 바이오메탄 사용 활성화(~2030) - 2015년 대비 에너지 집약도를 25-30% 수준으로 개선(~2030)
	금융 및 산업	- 친환경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Green Finance 활성화(녹색 채권, 지속가능성 채권 등)
	건물 및 난방	- 옥외 태양광 패널 백만개 설치(~2030) -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2023) -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한 난방(~2030) - 가스 난방 신규 설치 금지(2025~) - 석유 및 석탄 난방 퇴출(~2035)
	운송	- 운수산업 효율화(~2022) - E-Mobility 활성화(~2030) - 철도 교통 활성화(~2022)
	기타	- 기후·에너지 이슈에 대한 소통, 교육, 인식 개선 강화(~2023) - 미래 에너지 시스템 및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2025) - 바이오-경제 전략 수립

* 출처 : National Energy Climate Plan 및 2020-2024 신정부 프로그램

나) 기후보호법

○ 2011년 제정, 2017년 개정된 기후보호법은 6개 산업(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화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최대 허용치 규정

- EU 역내 탄소교역 외에도 산업영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보호대책 마련 및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기후정책의 근본적인 토대 역할

※ 2021-2030 기간에 대한 배출량 허용 규정 수립 및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법안 통과 시기 미정

다)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운동 전개

○ 2004년부터 자발적 시민 참여 및 오스트리아 에너지청의 지원 하에 △탄소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운동을 전개 중

○ 전문가 육성, 에너지효율 컨설팅, 정보제공 및 홍보, 효율기준 마련, 시민운동 촉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라) 기후 및 에너지 펀드 조성

○ 에너지 정책 실현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동 펀드에 연간 최대 1.5억 유로 상당의 기금 지원 중

※ 2007년부터 총 11억 유로의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9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1억240만 유로를 지원, 누적 프로젝트(2007~2018년)는 총 134,031개

- 동 펀드의 목적은 ①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연구 개발, ②새로운 교통 및 이동성 시스템의 개발, ③기후변화 관련 조치 및 시장에서의 성과 가속화에 기여하는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
- 특히, 자동차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 도시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전기 이동성 향상 등의 분야에 역점

마) 발전차액 지원제도

○ 2002년에 제정된 녹색전력법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 중

- 발전차액 지원 단가는 매년 녹색전력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지원 대상시설은 녹색전력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

(3) 탈원전 정책

○ 1972년 건설을 시작하여 1978년 츠벤덴도르프(Zwentendorf) 원전이 완공되었으나, 완공 직후 실시한 국민 투표 결과(반대 50.47%, 찬성 49.54%)에 따라,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 계획된 원전 건설도 모두 취소

- 이후 부족한 전력 대체를 위해 1979년부터 1988년까지 5개의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

○ 1999년 원자력 금지법을 제정, 핵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은 물론, 원자력 발전 역시 금지

(4) 신재생 에너지

○ 1970년대 제2차 석유파동 및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로 EU 내 선두 위치 차지

○ 오스트리아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중

- (바이오매스 및 재활용 폐기물)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80년대 초부터 중점 연구 개발/ 지난 20년간 여타 신재생 에너지 대비 가장 많은 투자

  ※ 2018년 기준 총 에너지 공급의 17%, 총 전력생산의 8%를 담당

- (태양광) 관련 산업규모가 지속 확대중이며, 발전 잠재력도 가장 큰 것으로 전망

  ※ 2018년 기준 총 에너지 공급의 1%, 총 전력생산의 2%를 담당

- (수력 발전) 도나우 강변에 위치한 다수의 대형 수력발전소뿐 아니라, 알프스 지역에 건설된 수력 에너지 저장소가 오스트리아 전력 수요 대응에 중요 역할을 담당

  ※ 2018년 기준 총 에너지 공급의 10%, 총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

- (풍력 발전) 풍력 자원이 풍부한 연안 국가는 아니나, 1996년부터 풍력 터빈 사용을 시작으로 풍력 에너지를 개발, 총 1,191개 풍력 터빈을 구축하고 국내 160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

  ※ 2018년 기준 총 에너지 공급의 1.6%, 총 전력 생산의 9%를 담당

- (열펌프 산업) 친환경적 비용 효율적 에너지 기술로서, 150년 전부터 대체 난방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열펌프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 규모는 2005년 이후 5배 증가

(5) 전기차 시장 육성

○ 2010년 중반부터 전기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7월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3,000유로에서 최대 5,000유로로 확대하는 방안 발표

-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019년 2% 2020년 3%, 2021년(1~3월) 9.4%로 급격히 성장 중

○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유럽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AVL, Borealis, Miba 등 6개 기업에 향후 8년간 최대 4,500만 유로 지원 예정

○ 비엔나 교통공사(Wiener Linien)은 2021년도 전기 버스 공개 입찰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전기버스 본격 도입 예정(2027년까지 총 82대의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 계획)

4. 과학기술

(1) 현황

○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인력, 자금 등 연구자원이 대학 연구기관에 집중

-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 과학 부문에 강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과학 분야에서 총 17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 전체 노벨상 수상자는 22명/ 과학 분야 17명(생리의학 8명, 화학 6명, 물리학 3명)

〈최근 오스트리아 출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Walter Kohn (1998년 노벨 화학상 수상) – 이론물리학자, 이론화학자 – 밀도범함수 이론을 개발	
Eric Kandel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 신경학자 – 신경계의 신호 전달에 대한 발견	
Martin Karplus (2013년 노벨화학상 수상) – 이론화학자 – 컴퓨터로 화학 반응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	

* 출처 : nobelprize.org

○ 사회 경제 발전의 기반은 교육, 과학, 연구라는 인식 하에 R&D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 증가

- 2019년에는 GDP 대비 R&D에 대한 국내 총지출 비율이 3.10%를 차지하여, EU 회원국 평균(약 2%)을 크게 상회
-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 제도 개정,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인프라 강화, 기업 혁신, 연구 제도 최적화, 정치적 통제의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R&D 비율을 2020년까지 3.76%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R&D 관련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방 정부	3,439.6	3,667.62	3,789.01	4,376.78
지방 정부	392.66	500.57	537.59	552.13
기업	5,532.82	5,610.62	5,727.87	5,030.81
해외 기관	1,874.27	1,944.37	2,081.07	1,997.83
기타	170.66	188.77	209.03	185.56
총 계	11,289.78	11,911.95	12,344.57	12,143,11
GDP 대비 비율(%)	3.06	3.09	3.10	3.23

* 출처 : Statistics Austria, Global R&D Estimate 2020

(2) R&D 국제 협력

○ GDP 대비 R&D 비율은 약 3% 수준으로 우리나라(약 4%)에 비해 낮으나, 해외 자금 비율은 약 15% 수준으로 R&D 국제 협력에 있어 높은 성과 시현중

- 이러한 높은 R&D 국제 협력 성과는 오스트리아 기초 과학 및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외국 기업의 높은 신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5. 대외무역

(1) 현황

○ 대외지향적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세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수출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 1995년 EU 가입이 수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

※ EU 가입 후 오스트리아의 수출은 연평균 약 9%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좋은 실적

○ 재화·서비스의 수출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동 수출입 비율이 EU 회원국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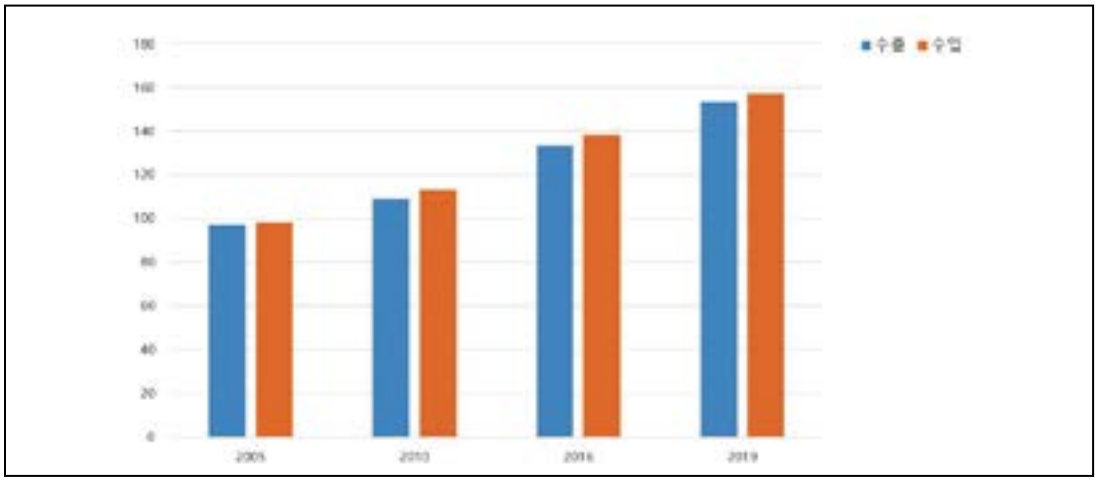
〈재화·서비스의 수출입 비율(단위 : %)〉

	1995년	2019년	EU 평균(2016년)
수출	33.6	55.7	46.6
수입	34.7	42.0	43.7

* 출처 : Statistics Austria

- 2019년 수입 1,578억 유로, 수출 1,535억 유로(약 43억 유로 적자)

〈오스트리아의 대외 무역액 추이(단위 : 10억 유로)〉



* 출처 : Statistics Austria

(2) 주요 무역 상대국

○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독일, 이태리, 중국, 미국, 체코,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프랑스 順으로, 2019년 EU 회원국들과의 무역규모는 전체 무역의 약 79% 차지

- 특히, 독일과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30% 이상

  ※ 2019년 수입액의 34.9%(약 552억 유로)를 독일로부터 수입하였고, 수출액의 29.3%(약 450억 유로)를 독일로 수출

- 2019년 기준 상위 수출국은 독일, 미국, 이태리 順(한국은 24위)
- 2019년 기준 상위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중국, 미국 順(한국은 29위)

〈2019년 오스트리아의 지역별 수출입 규모(단위 : 10억 유로)〉

	수입	수출	무역수지
유럽	124.4	121.2	-3.2
아프리카	2.2	1.9	-0.3
아메리카	8.8	14.4	5.6
아시아	22.1	14.0	-8.1
호주/오세아니아	0.1	1.7	1.6
총액	157.8	153.5	-4.3

* 출처 : Statistics Austria

○ 2000년대 들어 수출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이 증가 추세

- 2019년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은 수입 약 255.4억 유로, 수출 약 292.7억 유로 수준

(3) 주요 무역품

○ (주요 수출품) 자동차 부품, 엔진, 의약품 등이며, 주로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에 수출

- 오스트리아 자체의 자동차 생산 업체는 없으나, Mercedes Benz, BMW 등의 주문을 받아 완성차를 조립·생산

○ (주요 수입품) 승용차, 차량 부속품, 석유 및 석유가스, 의약품 등이며, 휴대폰 등 IT 관련 제품의 수입도 꾸준히 높은 비중 차지

- 최근 동유럽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

〈2019년 오스트리아의 품목별 수출입 규모(단위 : 10억 유로, %)〉

	수입	수출
식품, 축산	10.2 (6.5)	8.6 (5.6)
음료, 담배	1.0 (0.7)	2.8 (1.8)
원료	6.1 (3.9)	4.7 (3.1)
광물, 윤활유 등	12.3 (7.8)	3.6 (2.3)
동 · 식물성 기름, 왁스 등	0.4 (0.3)	0.3 (0.2)
화학제품	21.8 (13.8)	21.6 (14.1)
공산품	24.4 (15.5)	31.9 (20.8)
기계, 이동 수단	56.8 (36.0)	61.8 (40.2)
기타 제조품	23.7 (15.0)	17.3 (11.3)
기타 상품	0.9 (0.6)	1.1 (0.7)
총계	156.0 (100)	150.0 (100)

* 출처 : Statistics Austria

6. 공적 개발원조

(1) 현황

○ 2018년 ODA 규모는 약 10.09억 유로(GNI 대비 0.28% 수준)

- 2015년과 2016년간 오스트리아 국내 난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ODA 규모가 급증하다가, 2017년 이후 국내 난민에 대한 지원 및 부채 조정 프로그램 규모 감소로 ODA 총액 감소
- 2017.12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ODA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목표 기한은 미정

  * 유럽의회는 2015년 유럽의 ODA 규모를 2030년까지 GNI 대비 0.7% 수준으로 제시

〈최근 5년간 오스트리아의 ODA 증가 추이(단위 : 백만 유로, %)〉

년도	총액	양자	다자	GNI 대비 비율
2015	1,193.15	705.42	487.72	0.35
2016	1,477.37	890.25	587.12	0.42
2017	1,110.00	532.63	577.38	0.30
2018	987.59	409.09	578.50	0.26
2019	1,096.14	396.5	699.64	0.28

* 출처 : ADA, ODA Report 2019

○ 2019년 기준, 양자:다자 비율은 4:6 수준, 양자 내 유상원조는 0.1%에 불과

〈오스트리아의 양·다자 ODA 규모(단위 : 백만 유로, 2018년 기준)〉

	ODA 규모	비고
양자	409.09 (41.42%)	· 무상 : 400.65 (58.71%) · 유상 : 8.44 (0.85%)
다자	578.50 (58.58%)	· EU : 320.57(32.46%) · 국제 금융기구 : 225.32(22.82%) · 유엔 : 24.19(2.45%) · 기타 국제기구 : 8.42(0.85%)
총액	987.59(100%)	GNI 대비 0.26%

* 출처 : ADA, ODA Report 2019

(2) ODA 정책

○ 2002년 개발협력 기본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고, 동 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ODA 전략* 수립 및 △ODA 정책 이행 기관으로서 ADA(Austrian Development Agency) 설립

* “2019-2021년 ODA 프로그램(Three-year Programme 2019-2021)”주요 내용

- 목표 : ①빈곤 감소 ②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개발, ③환경 보호 및 보존 ④평화와 안보에 기여 ⑤ 포용적 사회 건설 및 여성 권익 증진
- 중점 협력 지역 : △남동유럽(코소보,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최빈 개도국(부르키나파소,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부탄), △취약지역(팔레스타인)

(3) 개발협력 기관 (ADA: Austrian Development Agency)

○ ODA 정책 이행을 위해 오스트리아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2004년 출범

- 코소보, 우간다, 아르메니아 등 12개 국가에 현장사무소 운영 중

〈2018년 ADA의 지역별 양자 ODA 배분 현황(단위 : 백만 유로)〉

지역	규모	비고
발칸 서부	10.37(12.01%)	코소보(2.7), 알바니아(1.76) 등
흑해	8.16(9.45%)	몰도바(2.12), 조지아(2.62), 아르메니아(1.92) 등
서아프리카	7.25(8.39%)	부르키나파소(4.53) 등
동아프리카	16.93(19.6%)	에티오피아(5.34), 우간다(8.54)
남아프리카	7.10(8.21%)	모잠비크(5.54) 등
히말라야	2.31(2.67%)	부탄(1.6) 등
캐리비안	0.31(0.35%)	-
기타	5.97(6.91%)	팔레스타인(4.53) 등
중점 협력 지역 총액	58.4(67.60%)	※ 중점 對 비중점 지역 지원 규모 7:3
비중점 협력 지역 총액	27.99(32.4%)	

* 출처 : ADA, ODA Report 2019

7. 최근 경제동향

(1) 경제 현황

○ 2019년부터 1%대의 낮은 GDP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해 -6.6%의 성장률 기록(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3.8%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

-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2021년 하반기 백신 보급 확대와,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 IMF는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4%로 예상

○ 2021년 인플레이션율은 1.6%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에는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동 기간 서서히 감소할 것이나 2019년 수준 회복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재정적자는 GDP의 약 8%로 2021년에도 적자가 계속돼 공공부채는 2021년 중 역대 최고 수준인 GDP 대비 87%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대응 봉쇄조치와 가계, 기업 지원에 기인
- 2022년부터는 GDP 성장 및 재정적자 감소에 따라 공공부채 수준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명목GDP	억유로	3,854	3,976	3,756	3,954	4,171
1인당 명목GDP	유로	43,374	44,879	42,193	44,203	46,397
실질 경제성장률	%	2.58	1.419	-6.59	3.478	4.0
실 업 률	%	4.892	4.525	5.333	5.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	2.122	1.493	1.391	1.647	1.812
재정수지(GDP대비)	%	-0.423	-0.707	-8.337	-4.817	-2.67
국가부채(GDP대비)	%	74.04	70.513	85.224	87.174	85.743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4.)

(2) 2021년 예산안(2020.10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발표)

○ 20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약 970억 유로)

- 기후보호, 안전망 확충, 교육 및 고용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점분야 지출계획도 다수 포함

○ 최근까지 정부의 안정적 예산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공부채(75%)를 유지/ 이로 인해 원활한 위기극복 예산편성 가능

- 2020년 코로나19 원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9.8%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GDP대비 -7.1%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5년에 GDP 대비 84.9%, 2019년에는 70.5%까지 감소했으나,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각 85% 및 88%까지 증가 예상

〈분야별 지출 계획〉

분야	금액(백만 유로)
노동, 보건, 복지(연금)	48,347.7
교육, 연구, 예술, 문화	16,261.6
경제, 인프라, 환경	18,181.8
법 및 질서/안정	11,173.2
환차익 등 재정수익	3,832.8

2021 오스트리아 개황 · AUSTRIA



PART IV

사회/문화

1. 사회·복지 제도
2. 교육제도
3. 언론
4. 문화·예술

1. 사회·복지 제도

가. 개요

○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된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GDP의 29.3%에 달하는 1,166억 유로를 사회복지에 지출

- 각종 연금, 가족수당, 실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의료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

○ 사회복지시스템은 크게 ①사회보장보험(연금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②자녀 수당, 육아 수당 등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각종 혜택 ③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최저 생계비 보장 등으로 구성

- 이 중 사회보장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인 및 피고용인의 의무가입 및 부담 공유 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납부금에 기반하며 분담률은 임금의 39%* 수준으로 한국(19%)과 비교시 상당히 높은 수준

  *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21%, 18% 씩 분담

○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사회보장세 조직법』개정에 따라 2020.1.1. 부터 9개주 지역 건강보험공단들을 하나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Österreichische Gesund- heitskasse, ÖGK)으로 통합

- 동 연방 건강보험공단은 오스트리아 국민의 약 82%가 가입되어 있는 최대 공적 보험기관

나. 노동관계법

○ 취업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 계약으로 성립되며, 노동 관계법은 피고용인의 각종 제반 권리를 보장

- 노·사·정 협력관계(사회적 파트너십)*하에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파업 발생이 적은 편

  * 주요 경제적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자발적 협력 체계로, 경제·사회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추구

○ (근로시간) 법적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 이하며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25-3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 향유

○ (해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고시에는 피고용인의 근속 연한에 따라 6주-5개월 前 사전 통보 필요 / 피고용인의 일방적 사직시에는 한달 前 통보

○ (노조) 5인 이상의 고용 기업에서 노조 결성 가능
- 오스트리아노조연맹과 연방노동회의소 및 개별 산별 노조에 의해 근로자 이익 보호

○ (임산부에 대한 보호) 임산부는 초과 근무 및 위험한 일을 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임산부 당사자가 희망하더라도 출산 전·후 각각 8주간 업무 투입 불가/ 임신기간 및 출산 후 4개월 경과시까지 해고도 불가

다. 장애인 정책

○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정책 원칙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핵심
-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장당 25명 중 1명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충족시 일정액을 장애인 기금으로 납부 필요/ 동 기금은 장애인의 각종 훈련 및 직업 알선 등을 위해 사용

○ 2006년 발효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발효

○ 2012년 장애인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채택, 250여개 조치 등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오스트리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중
- 2020년 계획을 보완하여 2021~2030년 국가 행동 계획 발표

라. 가족 정책

○ 가족 정책 및 수당 제도는 유럽 내에서도 잘 발달된 편
- 의료 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과 더불어 출산 수당, 자녀 수당 및 청소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
- 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 운영 중

○ 1955년 설치된 가족부담균등펀드를 통해 매년 약 70억 유로(2020년 기준) 상당의 가족 복지 예산 충당중

- 동 펀드는 고용주들의 기여금(월급의 3.9%), 소득세, 기업세 등으로 조달

마. 연금 제도

○ 사회보장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확립되어 있고, 기업주 및 고용자의 제보험(의료보험, 장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입이 강제적이며, 근로자의 자기 부담액이 상당히 높은 편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5.1월부터 만 50세 미만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금 개혁안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

- 조기 퇴직 억제 및 각 직업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연금 제도를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연금 납부 기간은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
- 65-45-80 원칙에 따라 은퇴 연령은 65세, 연금 납입기간은 45년, 전체 노동기간 평균 임금의 80%를 수령하는 방식 적용

○ 2020.1월부터 최저연금 3.6% 인상

- 장기연금 가입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40년 연금 납입시 최저연금 총 1,315유로 보장

○ 2020.1월부터는 중노동 종사자에게 조기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하클러 규정(Hacklerregelung)”을 재도입하여, 중노동 종사자 중 특히 여성들의 조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Hackler(하클러)“란 동부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중노동자를 일컫는 말

바. 주택 정책

○ 9개 연방 州별로 독자적 주택정책 수립

- 주택의 임대차, 소유권 등을 규정한 임대차법, 주택소유법, 비영리주택법 등 연방정부 관련 사항 외에는 1988년부터 주별로 독자적인 정책 시행

○ 피고용인이 세전 급여의 1%(고용주와 피고용인 각각 0.5%씩 부담)를 주택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각 연방주와의 재정협약에 따라 9개 연방주에 분배

- 동 기여금은 중산층 이하 주택의 건축 지원금으로 활용

○ 비엔나시의 사회주택은 크게 시영 임대주택(Council housing)과 상기 주택진흥기금으로 건축되는 사회주택(Subsidized housing)으로 분류

- 최근에는 州별 자체 예산으로 건축되는 시영 임대주택보다 주택진흥기금으로 지어지는 사회주택이 주된 추세

※ 2019년 기준 오스트리아 주거형태 중 월세 비율은 약 42.8%(비엔나 78.1%), 월세주택 중 시영 임대주택은 17%, 사회주택은 약 39% 차지

2. 교육제도

가. 개요

○ 1774년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부터 의무교육(6년)을 실시하였으며, 1869년에는 제국교육법을 제정하여 6~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8년)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오랜 의무교육의 전통 보유

○ 1918년 비엔나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근대적인 교육의 기틀을 다졌으며, 1962년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을 9년으로 확대

나. 주요 제도

(1) 법적 의무교육기간

○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은 9년(6~15세)이며, 이와 별도로 취학 직전 1년(5세 해당) 아동은 의무적으로 예비 교육 과정 수학 필요

○ 무상교육이 원칙이며,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상급과정(우리의 고등학교 해당)도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

(2) 초등교육 : 4년

○ 1명의 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시스템으로 운영(예외 : 종교, 외국어 등)

○ 초등학교 이수 후 인문계와 실업계로 중등교육 과정이 이원화

- 약 70%의 학생이 실업계, 약 30%가 인문계 진학

(3) 중등교육 하급과정 : 4년

○ 인문계 중등학교 하급학년

- 7학년 이후 교과 과정에 따라 ①인문 및 어문계 중학교(Gymnasium), ②이과계 중학교(Realgymnasium), ③경제계 중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으로 구분

○ 실업계 중등학교

※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모든 종류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나, 대부분 고급 직업고등학교(직업 자격증 및 대학진학에 필요한 Matura 취득 가능)에 진학하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6%에 불과

○ 새로운 중등학교

- 인문계·실업계 계열 이원화 시점(초등학교 졸업 후)이 너무 일러서 학생들의 적성에 맞춘 계열 선택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통합학교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이 없는 중학교

(4) 중등교육 상급과정 : 4~5년

○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

- 인문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 내용에 ①인문 및 어문계 고등학교(Gymnasium), ②이과계 고등학교(Realgymnasium), ③경제계 고등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로 구분
-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은 Matura라고 불리는 졸업시험으로 종료되며, 동 시험 통과시 대학 진학 자격 부여

○ 중급직업중등학교 : 3~4년

- 졸업 후 바로 정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분야별 실습 및 이론 수업으로 구성
- 졸업시 곧바로 전공 직업 관련 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Berufsreifeprüfung) 통과시에는 추가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3년간의 전문적인 실습 및 도제과정(advanced training course)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

○ 고급직업중등학교 : 5년

-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 과정에 준하는 일반 인문계 교육과 중급직업중등학교보다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병행하며, Matura(인문계 졸업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Reife- und Diplomprüfung) 통과시 전문 직업 자격증과 더불어 대학진학 자격(dual qualification) 부여

○ 취업준비학교 : 1~2년

- 9년 의무교육 직후 직업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 실습 및 도제과정 준비 위주로 진행되며, 실습 또는 도제 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1년 추가 수학도 가능

○ 직업학교 : 2~4년

- 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을 병행하며, 약 2~4년 소요
- 전공분야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을 보게 되며, 동 시험을 통과한 졸업생은 자신의 전공분야 관련 마이스터 자격시험(Meisterprüfung ; 기능분야 최고 자격증)에 응시하거나 대학 진학 자격이 부여되는 시험(Reife- und Diplom- prüfung) 응시 가능

(5) 고등교육 : 평균 3~4년

○ 국립대학 22개, 사립대학 12개, 응용과학대 21개 등에서 고등교육 실시

- 국립대 수업은 내국인 및 EU 국적자의 경우 무료(그 외 국가 학생은 학기별로 746.92 유로 납부),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비엔나 대학(1365년 설립)이 대표적
- 사립대학으로는 세계적인 펀드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중앙유럽대학(CEU) 등 운영 중
- 응용과학대는 직업 관련 전문 기술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유사

○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0 겨울학기 기준 대학 재학생은 약 376,050명(여성 54.8%)이며, 이 중 외국인 유학생은 101,359명(26.9%)

- 외국인 유학생 중 EU 국적자가 71%, 타 유럽 국가 국적자가 16%, 아시아 및 다른 나라 국적자가 13% 차지
- 국립대학의 경우, 인문학(27%), 자연과학(16%), 공학(16%), 사회과학·경제(15%) 順으로 전공 선택

3. 언 론

가. 개요

○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검열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1982년 언론법은 언론자유의 세부 조항들을 규정

○ 약 20종의 신문이 발간(신문 배포부수는 약 5백만부)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국영방송 ORF, 민영방송 ATV 외 독일계 방송채널이 다수

나. 뉴스 통신사

○ APA(Austria Presse Agentur)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통신사로 독어 및 영어 서비스를 제공, 국내 일간지 12개사와 방송국(ORF)의 합자 회사로 설립

다. 신문사

○ der Standard : 진보 성향의 일간지로 미국의 New York Times를 모델로 1988년 설립,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타 언론에 비해 많은 특파원 파견 중

○ die Presse : 중도, 보수 성향의 일간지로 1848년 창간된 이래 국제적 사건 보도를 통해 명성을 쌓아온 권위있는 일간지

○ Kronen Zeitung / Kurier : 오스트리아 내 가장 인기 있는 대중지이며, 같은 신문사 소속

- Kronen Zeitung은 스캔들 위주의 황색지로 쉽고 짧은 기사보도가 특색이며, Kurier지는 정론지와 황색지의 중간

○ 기타 Österreich(대중지), Heute(대중지, 무가지) 등

신 문 명		판매부수(2018년 기준)
1	Kronen-Zeitung	1,893,898
2	Kleine Zeitung(그라츠 및 클라겐푸르트 지역)	612,910
3	Heute	580,551*
4	Österreich	383,743
5	Kurier	368,553
6	Tiroler Tageszeitung(인스부르크 지역)	173,626
7	Die Presse	148,699
8	Oberösterreichische Nachrichten(린츠 지역)	104,460
9	Salzburger Nachrichten(잘츠부르크 지역)	68,297
10	Vorarlberger Nachrichten(브레겐츠 지역)	59,343
11	Der Standard	57,378

* 출처 : Statistics Austria, Kulturstatistik 2018/ 무료신문은 인쇄부수 통계로 대체

라. 방송사

(1) 공영방송

○ ORF(Österreichischer Rundfunk)는 오스트리아 국영 TV 채널 2개를 보유 중

- ORF 1은 스포츠, 오락, 청소년, ORF 2는 문화, 시사 위주로 편성

○ 라디오 채널은 Ö1(뉴스, 문화, 교양), Ö2(지역방송), Ö3(팝뮤직) 등

(2) 민영방송

○ ATV는 2000년 오스트리아 유일의 민영 TV로 설립된 이후, 케이블을 통해서만 방송되다가 2003년부터 공중파 방송 시작

○ 신문사 Österreich 소속 Österreich24 채널은 2016년부터 케이블에서 오스트리아 뉴스 채널 방송 시작

○ 그 외 독일 민영방송사가 설립·운영하는 Puls 4, ProSieben Austria, RTL Austria, Sat.1 Österreich 등 방송 중

4. 문화·예술

가. 개요

○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연극, 건축 등 예술분야에서 유럽 내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

- 특히, 음악은 국민의 생활 속 중요한 부분을 차지

나. 음악

(1) 세계적 음악의 산실

○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요한 슈트라우스 1세, 2세 등 유수한 세계적 음악가들의 출생지 및 활동 무대로 유명

○ 국민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한 높은 수준으로, 매년 7~8월 잘츠부르크 음악제, 브레겐츠 음악제, 9월 린츠 브루크너 음악제 등 세계적인 음악제 개최

(2) 주요 공연장

○ (국립오페라하우스(Staatsoper)) 1869년 요제프 1세에 의해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건립되었으며, 세계적인 오페라 및 발레 극장으로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 7, 8월을 제외하고 연중 300여 작품 공연

* 비엔나 국립오페라 하우스, 파리 오페라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

○ (무직페라인(Musikverein)) 1860년대 후반에 건축되었으며,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무대이자 세계적 명성이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연주자들의 공연 장소

○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

(3) 주요 공연 단체

○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moniker))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오토 니콜라이가 1842년 창단 / 매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신년 콘서트가 유명

○ (비엔나 소년 합창단(Wiener Sängerknaben)) 세계 제일의 미성을 자랑하는 합창단으로 1498년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 조직된 이래 성 스테판 성가대와 함께 지금까지 비엔나 음악의 산 역사

(4) 주요 음악 축제

○ (잘츠부르크 음악제) 매년 7월 중순~8월말까지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되며, 1917년 호프만슈탈(극작가)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작곡가)에 의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오스트리아 음악축제로서의 명성 유지

- 동 축제 기간 중 비엔나의 모든 음악인들이 잘츠부르크에 집결하며, Dom 광장에서 호프만슈탈의 “예더만(Jedermann)” 상연을 시작으로 전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돌입

○ (기타 음악제) △린츠의 ‘국제 브루크너 음악제’, △포랄베르크州의 ‘슈베르티아데 음악제’, △니더외스터라이히州의 ‘그라페네그 음악제’, △부르겐란트州의 ‘하이든 기념 음악제’, △인스부르크의 고음악 축제, △호수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음악제’등이 유명

다. 문학

○ 오스트리아의 문학사는 슈타이어마르크州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가 모음집이 기록된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12세기~13세기에 궁정시가 발전 / 이후로는 왕실에서 극예술을 적극 장려

○ 오스트리아 문학은 흔히 독일 문학의 일부로 여겨지나,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고, 19세기 후반에는 비엔나의 국제성을 반영한 '코스모폴리탄(범세계적)'성이 강한 문학이 나타날 만큼 독자성 보유

- 고전으로는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니벨룽겐의 노래'와 같은 국민 서사시와 '민네징가의 노래' 등이 유행하였으며, 소설 및 희곡 분야에서는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후고 폰 호프만슈탈, 아르투어 슈니츨러 등이 두드러진 활약

○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2명이나 배출

- 엘프리데 옐리네크(2004년), 페터 한트케(2019년) 수상

라. 회화

○ 비더마이어 시대(1815~1848)의 회화는 자연의 실제적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하여, 오스트리아 리얼리즘이라고 알려진 양식이 유행

※ 비더마이어(Biedermeier) 시대 : 나폴레옹에 의해 크게 개편된 유럽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했던 시기 / 중유럽에서는 중산층의 숫자가 증가하던 시기로 예술의 대중성이 강조

○ 근대에는 기하하적 모양의 장식적 요소와 금박에 그려진 꽃 등을 사용, 신체를 추상적으로 묘사한 작품인 '키스'로 유명한 클림트(Gustav Klimt)가 있으며, 이외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등이 유명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에곤 실레, '자화상'

마. 건축

○ 19세기 후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낭만주의와 고딕,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 등 과거의 양식을 조합한 역사주의가 유행

- 같은 시대에 건립된 오페라 하우스는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 비엔나 시청은 네오고딕 양식, 미술사 및 자연사 박물관은 신고전주의 양식, 국회의사당은 헬레니즘 양식 등 채택

○ 건축가 중에서는 근대 비엔나 건축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오토 바그너(Otto Wagner)가 가장 유명

- 바그너는 비엔나 칼스플라츠 전철역, 우체국 저축은행 등을 설계하였으며, 실용적인 예술을 지향

○ 이 밖에 훈데르트바써, 아돌프 로스 등도 비엔나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명성



오토 바그너 '우체국 저축은행'



훈데르트바써, '훈데르트바써하우스'

바. 철학, 경제학 등

○ 합스부르크 왕가 지배 하에서 독특한 카페 문화를 일궈 냈으며, 오스트리아의 지성인들은 카페에 모여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일상의 문화 창출

- 19세기 전후 비엔나는 유럽의 근대 철학과 경제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근대 서구 지성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뿐 아니라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칼 포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조지프 슘페터 같은 지성을 배출

2021 오스트리아 개황 · AUSTRIA



PART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 관계
2. 경제·통상 관계
3. 과학기술 협력 관계
4. 문화 관계
5. 재외동포 현황
6. 친선단체 현황
7. 북한과의 관계

1. 정무 관계

○ 1892.6.23.(고종 29년) 조선과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간 '조·오 수호통상조약'체결로 최초 외교 관계 수립(2022년 양국 수교 130 주년)

- 1963.5.22.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966.12.1. 상주대사관 설치

○ 2007년 피셔 대통령 국빈방한 이후 정상급 교류가 없었으나,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공식방문, △2019년 쿠르츠 총리의 최초 양자 공식 방한 등 최근 고위급 교류 활성화 추세

○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쿠르츠 총리 통화(4.28.), △쿠르츠 총리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8.28.) 등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지속

〈양국 고위급 교류 실적〉

한국 방문	오스트리아 방문
○ 2000.10월 쉬셀 총리(ASEM 정상회의) ○ 2001.5월 페레로-발드너 외교장관 ○ 2007.4월 피셔 대통령 국빈방문 ○ 2007.12월 프라머 하원의장 ○ 2014.10월 루프레히터 농림부 장관 ○ 2016.9월 브란트슈테터 법무부 장관 ○ 2017.9월 아몬 오한의원친선협회장 ○ 2018.2월 슈트라헤 부총리/체육부 장관 (평창동계올림픽) ○ 2018.11월 슈람뵉 디지털·경제부 장관 ○ 2019.2월 쿠르츠 총리 공식 방한	○ 2002.5월 최성홍 외교장관 ○ 2004.10월 이해찬 국무총리 ○ 2004.11월/ 2005.9월 오명 부총리·과기장관 ○ 2006.4월 반기문 외교장관(비공식) ○ 2006.9월/ 2007.9월 김우식 부총리·과기장관 ○ 2009.5월 김형오 국회의장 ○ 2010.9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 ○ 2014.10월 양승태 대법원장 ○ 2015.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 2015.8월 황우여 부총리·교육장관 ○ 2016.12월 윤병세 외교장관(IAEA) ○ 2017.10월 정세균 국회의장(경유) ○ 2018.5월 이낙연 국무총리 공식방문 ○ 2018.5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1970.6월), △무역협정(1971.9월), △사증면제협정(1979.3월), △항공협정(1979.5월, 개정 1996.8월), △섬유협정(1979.6월, 종료 1982.7월), △이중과세방지협정(1985.10월, 개정 2001.5월), △투자보장협정(1991.3월), △사회보장협정(2010.1월) 등

※ 그 외 과학기술협력 공동선언(2007.4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공동선언(2017.12월 개정) 등

2.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8년 29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큰 변동 없이 27억불 유지(전년대비 11.4% 증가)

- 2019년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세와 맞물려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컴퓨터, 자동차(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상품 수출이 증가

※ 2019년 대비 對 오스트리아 수출 증가율은 약 23%이며, 품목별로는 건전지 109%, 컴퓨터 93%, 자동차 부품 30%, 자동차 8.5%의 증가율 시현

- 2020년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2016년 2.5억불 이래 최저치(약 5.6억불) 기록

〈 최근 5년간 한-오스트리아간 교역 현황(단위 : 백만불,%)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 (전년대비 증감률)	840 (-4.8)	959 (14.2)	1,077 (12.3)	865 (-19.7)	1,066 (23.3)
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1,092 (-7.2)	1,615 (47.9)	1,810 (12.1)	1,553 (-14.2)	1,628 (4.8)
총교역량	1,932	2,574	2,887	2,418	2,694
무역수지	-252	-656	-733	-688	-562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전기자동차),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엔진), 의약품, 계측제어분석기(정밀기계) 등

- 특히,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 및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을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부가가치 정밀 기계(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출 기계 등)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관계

* 수출 1위 컴퓨터와 2위 반도체는 동유럽 지역 삼성전자 협력업체 제품 수요분

** 2020년 말 기준, 현대 및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약 8.2%로써, 1위 폭스바겐 15.3%, 2위 Skoda 9.9%에 이어 3위 / 전기차 분야에서는 기아차(Niro) 단독으로 4위(8.4%)이나, 5위(7.4%)인 현대차(코나)와 합치면 한국차 점유율은 15.8%로 Tesla(20.2%)에 이어 2위

*** 수입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조립 생산기업인 마그나슈타이어가 위탁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BMW, Benz G-Class 차종과 그 부품인 것으로 파악

〈 對오스트리아 수출입 상위 5대 품목(단위 : 백만불, %) 〉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품목	2019년		2020년		품목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865	-19.7	1,066	23.3	전체	1,553	-14.2	1,628	4.8
컴퓨터	113	-17.1	217	92.9	자동차	343	-41.4	342	-0.5
반도체	183	-14.5	178	-2.8	원동기/펌프	159	143.7	124	-22.2
자동차	153	22.3	166	8.5	자동차 부품	53	-30.8	74	39.3
건전지/축전지	37	-58.5	77	108.7	농약/의약품	68	-21.5	72	6.4
자동차 부품	56	-42.0	73	30.2	계측제어분석기	57	10.8	59	4.2

* 출처 : 한국무역협회, MTI 3기준

나. 투자

○ (韓→오) 2020년말 누계 신고금액 기준, 약 16억불(총 125건)

- 과거에는 물류,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래형 자동차 분야 및 부동산 투자도 활성화 추세

※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주요 투자 사례

- (LG 그룹/ LG 전자) 2018.4월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회사 ZKW社(헤드램프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 지분 100% 인수(약 13.42억불)
- (삼성 SDI) 2015.2월 오스트리아 마그나 슈타이어社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팩 생산 자회사인 MSBS(마그나 슈타이어 배터리 시스템)社 지분 100% 인수(약 1억불)
- (KTB 투자증권) 2019.5월 비엔나 소재 T-Center 매입(약 3,900억원)
- (매리츠/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2019.7월 비엔나 힐튼호텔 건물 매입(약 4,400억원)

〈최근 5년간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투자 현황(단위 : 건, 백만불)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건수	8	5	15	3	4	125
금액	6	49	1,338	3	6	1,603

* 출처 :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 (오→韓) 2020년말 누계 신고금액 기준 약 2.9억불(총 152건)

-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겨냥하거나, 한국 소재 대기업에 납품할 목적의 그린필드형*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 이미 건설된 공장이나 회사를 사서 진출하는 브라운필드 투자 방식과 상반

※ 對한국 투자 주요 오스트리아 기업 : △엥겔/Engel(사출성형기계), △팔핑거/Palfinger(크레인), △가이스링거/Geislinger(선박부품), △플란제/Plansee(정밀소재/ 삼성전자 납품) 등

〈최근 5년간 오스트리아의 對한국 투자 현황(단위 : 건, 백만불)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건수	6	5	4	6	11	147
금액	1.5	8.3	49.6	4.7	25.7	280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기준

다. 오스트리아 진출 우리 기업 현황 (2021.5월 현재, 총 19개사)

	업 체 명	분야	진출연도	진출형태
1	삼성전자	전기/전자	1988	판매법인
2	LG 전자	전기/전자	1987	지점
3	기아자동차	자동차	2002	판매법인
4	금호타이어	타이어	2003	지점
5	대한항공(여객/화물)	운송	2004	지점
6	아시아나항공(화물)	운송	2004	지점
7	현대 글로비스	운송	2011	지사
8	포스텍 전자	자동차부품(센서)	2016	마케팅법인
9	삼성 SDI	배터리팩	2014	생산법인
10	우진 플라임	사출성형기	2014	R&D 법인
11	미원	화학	2014	R&D 법인
12	삼성 SDS	ICT	2018	지점
13	하나로 TNS	물류	2007	법인
14	KCP	기계	2018	법인
15	한국타이어	타이어	2019	법인
16	LG(ZKW)	자동차부품	2018	법인
17	SC.Min	철강	2019	법인
18	버넥트	증강현실	2020	지점
19	피엔엘 인터내셔널	물류	2012	지점

3. 과학기술 협력 관계

가. 양국 정부간 교류 현황

○ △과학기술 장관회담(1998.9월, 2003.9월, 2004.11월), △과학기술협력 공동선언문 체결(2007.4월), △양국 과학의 날(학술회의) 개최(2007.9월 비엔나, 2010.5월 서울) 등 계기 활용, 과학기술 협력 지속

○ △쿠르츠 총리 방한(2019.2월)시 양국 관계부처 장관간 과학기술협력 MOU를 체결, 동 MOU에 기반하여 △제1차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19.7월 비엔나)

- 제1차 과기공동위시 2020-2022년간 9개 과제의 인력교류사업 추진 및 2020년 하반기 과학의 날 개최(코로나19로 연기) 등 합의

나. 양국 정부간 공동연구 현황

○ 양국 정부는 한-오스트리아 과기협력 기반구축 사업(2007-2012년)을 통해 주요 협력분야(나노, 로보틱스, 환경, 바이오, 신약개발 등)를 선정하고 공동연구(11개 과제)를 지원

○ 한국연구재단은 오스트리아과학재단과 공동연구(2012-2015년 3개 과제, 2017-2019년 4개 과제)에 이어 한-오스트리아 인력교류사업(2020-2021년 9개 과제)에 착수

다.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 현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오스트리아기술연구원(AIT)과 에너지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위한 MOU 체결(2013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오스트리아지질조사국(GBA)과 지구과학 분야 MOU 체결(2019년)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잘츠부르크대학과 공동연구(광전이열 발광현상을 이용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유리 복원기술, 2020.3월-2021.12월) 수행 중

4. 문화관계

가. 음악분야

○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양국 정부간 대표적인 문화교류협력 사업으로 정착

- 1999년 창설된 비영리 오케스트라로, 창단 이래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
- 우리 젊은 음악도들의 등용문이자 양국간 문화 협력을 상징

※ 2021.10.26.(목) 제22회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공연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

나. 한국학

○ 비엔나대 한국학과 및 인스부르크대 언어학과에 한국어 강좌 개설 중

- 비엔나대 한국학과는 2000년에 설치되어 학사·석사 과정에 1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
- 인스부르크대 언어학과는 2006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 어학강좌, 비교문법, 한국문화사 등 과목을 100여명의 학생이 수강 중

5. 재외동포 현황

가. 동포사회 특징

○ 1950년대 후반부터 한인 학생들(음악, 종교, 의학 등 전공)이 유학을 오면서 이주 역사가 시작

- 1972년 및 1973년 2차례에 걸쳐 파견된 간호사 100명이 정착하고,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유입 되면서 한인 동포사회 구성

※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지원으로 1959-1992년간 100여명이 유학

○ 2012년 한인문화회관*을 자체 모금을 통해 건립할 정도로 단결력과 협동심이 강하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등 모범적인 동포사회 유지·발전 중

* 한인문화회관

- 비엔나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도나우 공원 내 건축물을 50년 장기임차(연간 임차료 1유로) 후 리모델링하여 2012년 개관
- 리모델링 비용 총 170만 유로를 △한인 동포 건축기금 모금액 150만 유로, △재외동포재단 후원금 15만불, △오스트리아 문화재청 지원금 등으로 충당
- 현재 비엔나 한글학교 및 각종 한인회 주최 행사(한인여성합창단, 한인문우회, 국제부인회 등), 한-오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장소로 활용 중

나. 재외동포 규모

○ 약 2,500명의 재외동포가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2021.5월 기준)

- △유학생 750여명(대부분이 음악도), △영주권자 450여명, △지상사원 및 일반 단기체류자 800여명, △오스트리아 국적자 500여명으로 구성
- 80%가 수도 비엔나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그라츠, 린츠, 잘츠부르크, 티롤 등 주요 도시에 분산 거주

다. 주요 한인단체 및 활동

○ (한인회) 비엔나 소재 한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주요 도시별로 지역 한인회(린츠, 그라츠, 잘츠부르크, 티롤, 클라겐푸르트) 구성

※ 연 3회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지 발간,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송년의 밤 행사 등 한인회 차원의 다양한 정기 행사 개최 중

- 음악 분야 종사 동포들이 많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음악행사(신년음악회, 가곡의 밤 등)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문화 행사 추진
- 직능별로 과학기술자협회, 간호협회, 국제부인회, 여성합창단, 문우회, 지상사협의회, 유학생회 등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

○ (종교단체) 비엔나에는 한인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정동 교회, 재림교회, 한인 천주교회 등 소재

- 이 밖에 잘츠부르크/린츠 한인교회, 인스부르크 만나선교회, 그라츠 한인교회 등 소재

○ (주말 한글학교) 한인 2~3세의 한글교육과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해 4개(비엔나, 린츠, 그라츠, 티롤) 한글학교 운영중

〈 한글학교 운영 현황 (2021.5월 현재) 〉

한글학교명	학생수(명)		교사수 (명)	교장
	재외동포	외국인		
비엔나 한글학교	78	0	18	한성애
린츠 한글학교	5	0	2	금석만
그라츠 한글학교	7	24	3	김민재
티롤 한글학교	13	0	4	최선미

6. 친선단체 현황

가. 오스트리아-한국 친선협회

○ 오스트리아에 한국을 알리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1972년 귄터 빈클러 (Dr. Günther Winkler) 교수가 설립

- 2011년부터 베르너 아몬(Werner Amon) 의원이 회장직 수임 중이며, 현재 전·현직 하원의원, 대학교수 등 약 400명이 회원으로 등록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 오스트리아선수단 응원을 위해 슈트라헤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오 공동응원단을 구성하여, 평창 오스트리아 하우스에서 '오스트리아 올림픽팀 환영 갈라 콘서트'등을 개최





나.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

○ 오스트리아측 협회장 : Gerhard Deimek(자유당, 하원)

- 회원 : 2020년말 기준 총 12명

※ Peter Wurm(자유당), Lukas Brandweiner(국민당), Maria Großbauer(국민당), Klaus Lindinger(국민당), Peter Weidinger(국민당), Karin Greiner(사민당), Philip Kucher(사민당), Nina Tomaselli(녹색당), Eduard Köck(국민당), Stefan Schennach(사민당), Douglas Hoyos-Trauttmansdorff(NEOs)

○ 우리측 협회장 : 이철규(국민의힘)

- 회원 : 2021.5월 기준 총 7명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부회장), 최형두(국민의힘, 부회장),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이명수(국민의힘), 조해진(국민의힘)

다. 명예영사(총 5명)

관할지역	성명	임기
주그라츠 명예영사	헬무트 리스트 (Helmut List)	2017.5.31.~2022.5.30.
주린츠 명예영사	페터 한스 노이만 (Peter Hans Neumann)	2017.9.18.~2022.9.17.
주인스부르크 명예영사	리하르트 하우저 (Rihard Hauser)	2018.3.26.~2023.3.25.
주잘츠부르크 명예영사	루돌프 아이힝어 (Rudolf Aichinger)	2018.12.4.~2023.12.3.
주클라겐푸르트 명예영사	한노 부르거-샤이들린 (Hanno Burger-Scheidlin)	2017.5.31.~2022.5.30.

7. 북한과의 관계

가. 오스트리아의 對한반도 문제 인식

○ 중립국이자 핵비확산 선도국으로서 북핵 문제 및 대북 정책에 있어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

※ 오스트리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4월) 및 북미정상회담(2018.6월)에 대한지지 성명 발표/쿠르츠 총리 명의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위터 메시지 발표

- EU의 對한반도 공동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
- 다만, EU의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 기조 및 오스트리아의 대화와 외교를 중시하는 입장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

나. 오스트리아의 對북한 정책

○ 과거 등거리 중립외교 정책에 따라 북한과 1974.12.17. 외교관계 수립

- 냉전시기 사민당 소속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교류의 잔재로서 피셔 前 대통령도 오스트리아-북한 친선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 소유

○ 주중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북한을 겸임하다가 2012년부터 주한대사관이 북한대사관 겸임 중

- 1976년 개설한 주평양 오스트리아 상무관실은 1988년 폐쇄

○ 양국간 실질 관계 및 고위인사 교류 실적도 미미한 수준

다. 주오스트리아 북한 대사관 관련

○ 2020.3월 최강일 대사 부임(2020.6.30. 신임장 제정)

※ 최강일 대사는 2011-15년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IAEA 업무 담당) 근무, 외무성 미주국 과장(2007년), 6자 회담 및 북미관계 정상화 대표(2008년) 등 역임

○ 주오스트리아 북한 대사관은 1976.9월 설립, 1993.3월부터 주비엔나 소재 국재기구 대표부 역할도 겸임

라. 오스트리아-북한 경제 관계

(1)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01년 1천만불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속하여 현재는 50만불 미만

〈오스트리아-북한간 교역 규모〉

연도	교역액	대북 수출	대북 수입
2019	149.2만불	47.6만불	101.6.만불
2020	41.8만불	18.3만불	23.5만불

(2) 북한의 對오스트리아 채무 문제

○ 2018년 기준 북한의 對오스트리아 채무 규모는 1억4천5백만 유로(이자 포함시 약 1억5천6백만 유로)로 집계 / 동 채무는 1970-80년대 북한의 농업경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발생

(3) 오스트리아의 對북한 인도적 지원

○ 오스트리아 적십자사가 2016년 발생한 북한 홍수피해 지원을 위해 동년 IFRC에 1만 유로 기탁

2021 오스트리아 개황 · AUSTRIA



PART VI

부 록

1. 주요인사 인적사항

2. 역대 공관장

3. 오스트리아 소재 주요 국제기구 개황

1. 주요인사 인적사항

가. 연방 대통령

성 명	Alexander Van der Bellen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생년월일	1944.1.18.(만 77세), 비엔나 출생	
학 력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 경제학 석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 경제학 박사	
경 력	1968~1970 인스부르크대학 경제대 강사 1971~1975 인스부르크대학 경제대 조교수 1976~1980 인스부르크대학 경제대 교수 1980~2009 비엔나대학 경제대 교수 1994~2012 연방하원 의원(6選)/녹색당(Grüne) 1997~2008 녹색당(Grüne) 대표 2012~2015 비엔나 주 의원 2017.1월~ 연방 대통령(무소속)	
종 교	기독교	
가족관계	기혼, 2남 ※ 네델란드계 러시아인 아버지와 에스토니아 출신 어머니가 舊 소련의 박해를 피해 오스트리아에 정착	

나. 연방 총리

성 명	Sebastian Kurz (세바스티안 쿠르츠)	
생년월일	1986.8.27.(만 34세), 비엔나 출생	
학 력	비엔나대학 법학과(중퇴)	
경 력	2008~2012 국민당(ÖVP) 비엔나 청년부장 2009~2017 국민당(ÖVP) 연방 청년부장 2010~2011 비엔나 주의회 의원 2011~2013 내무부 정무차관(국민통합업무 담당) 2013~2017 외교장관 2017~ 국민당(ÖVP) 대표 2017.12월~2019.5월 연방 총리(1기 내각) ※ 2019.5월 국민당-자유당 연정 붕괴로 쿠르츠 총리 불신임 2020.1월~ 현재 연방 총리(2기 내각)	
가족관계	미혼	
기 타	민주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연소 총리 2019.2월 공식 방한	

다. 외교장관

성 명	Alexander Schallenberg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생년월일	1969.6.20.(만 51세), 스위스 베른 출생	
학 력	비엔나 대학 법학과 학사 벨기에 College d'Europe 석사	
경 력	1997 외교부 입부 2000~2005 주벨기에 오스트리아대표부 근무 2006~2013 외교부 대변인 2013~2017 외교부 외교전략기획실장 2018~2019.5 총리실 EU 정책총괄실장 * 2018년 하반기 오스트리아 EU 의장국 활동 총괄 2019.6~현재 외교장관	
가족관계	기혼, 자녀 4명	
참고사항	아버지(Wolfgang Schallenberg)는 외교차관을 역임했으며,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인도, 스페인, 프랑스에서 성장 2019.5월 국민당-자유당 연정 붕괴 및 쿠르츠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이후 출범한 과도정부에서 외교장관으로 임명 2020.1월 출범 쿠르츠 2기 정부의 외교장관으로 취임	

라. 연방 하원 의장

성 명	Wolfgang Sobotka (볼프강 소보트카)	
생년월일	1956.1.5.(만 65세), 바이트호펜 출생	
정당/지역구	국민당(ÖVP)/ 니더외스터라이히	
학 력	비엔나 음악·공연예술대학(첼로, 음악교육 전공) 린츠 브루크너 음대(지휘 전공) 비엔나대학 역사학 석사(Mag. phil.)	
경 력	1972~1998 음악교사 1982~1996 바이트호펜市 시의원 1987~1998 비엔나 음대 강사 1992~1996 국민당(ÖVP) 니더외스터라이히州 지부 컨설턴트 1996~1998 바이트호펜市 시장 1998~2005 니더외스터라이히州 주정부 재무 · 개발장관 2005~2008 니더외스터라이히州 주정부 재무 · 주택장관 2009~2016 니더외스터라이히州 부지사 2016~2017 내무부장관 2017.12월~ 연방하원 제1의장	
가족관계	기혼, 자녀 6명	
취미생활	음악, 독서, 원예, 스포츠가 취미이며, 1986년부터 바이트호펜 실내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	

마. 오-한 의원친선협회장

성 명	Gerhard Deimek (게르하르트 다이멕)	
생년월일	1963.01.09.(만 58세)	
학 력	비엔나 공과대학(TU Wien) 기계공학 석사	
직 책	오스트리아 연방 하원의원(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 소속당 :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FPÖ) - 지역구 :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州, 4選	
경 력	1991~현재 자유당 소속 오버외스터라이히州 의회 의원 1994~2004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社 근무 * 푀스트알피네는 한국의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 최초로 제철 기술(Corex 공법)을 이전해준 업체로, 동 분야 세계적 기업 2004~2010 Siemens社 프로젝트 매니저 2005~현재 오버외스터라이히州 Steyr-Land 지역구 자유당 대표 2008~현재 하원 의원(오버외스터라이히州 자유당대표 대행) 2020~현재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	
가족관계	기혼, 자녀 2	

2. 역대 공관장

가. 주오스트리아대사 ※ 1963~1966간 주스위스대사가 겸임

○ 초 대 대사 유양수(1967~1971)

○ 제2대 대사 이성가(1971~1973)

○ 제3대 대사 한표욱(1973~1977)

○ 제4대 대사 김영주(1977~1980)

○ 제5대 대사 심명원(1980~1982)

○ 제6대 대사 김형근(1982~1985)

○ 제7대 대사 이시용(1985~1989)

○ 제8대 대사 이장춘(1989~1992)

○ 제9대 대사 이시영(1992~1995)

○ 제10대 대사 이승곤(1995~1998)

○ 제11대 대사 반기문(1998~2000)

○ 제12대 대사 최상덕(2000~2002)

○ 제13대 대사 최영진(2002~2003)

○ 제14대 대사 조창범(2003~2006)

○ 제15대 대사 김성환(2006~2008)

○ 제16대 대사 심윤조(2008~2011)

○ 제17대 대사 조 현(2011~2014)

○ 제18대 대사 송영완(2014~2016)

○ 제19대 대사 신동익(2016~2019)

○ 제20대 대사 신재현(2019.6월~현재)

나. 주한대사

○ 초 대 대사 Peter Moser(1985~1989)

○ 제2대 대사 Feliz Mikl(1989~1993)

○ 제3대 대사 Horst Mezzei(1994~1997)

○ 제4대 대사 Ewald Jäger(1997~2001)

○ 제5대 대사 Helmut Böck(2001~2005)

○ 제6대 대사 Wilhelm Donko(2005~2009)

○ 제7대 대사 Josef Müllner(2009~2013)

○ 제8대 대사 Elisabeth Bertagnoli(2013~2017)

○ 제9대 대사 Michael Schwarzinger(2017~2020)

○ 제10대 대사 Wolfgang Angerholzer(2020.7월~현재)

3. 오스트리아 소재 주요 국제기구 개황

가. 개요

■ 비엔나에는 다양한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소가 소재

○ 비엔나에는 비엔나 국제센터(VIC: 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유엔공업기구(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등 유엔기구/기관 외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석유수출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등 다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소가 소재

※ OSCE 사무국은 합스부르크가의 왕궁인 호프부르크(Hofburg)에 소재

* 오스트리아 정부와 비엔나시가 비용을 분담하여 1979년 완성된 비엔나 국제센터에는 약 20여개 유엔기구/기관이 소재하며, 100개국 이상 출신의 국제 직원 3,600여명을 포함한 직원 5,000여 명 근무 중

  - 유엔 비엔나 사무소(UN Office in Vienna)가 동 센터 소재 유엔 기구/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업무 담당(유엔 사무소는 뉴욕(본부), 비엔나, 제네바, 나이로비에 소재)

○ 이외에도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준 국제기구 사무국도 다수 소재*

*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 등



비엔나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

■ 우리나라는 아래 국제기구(위원회 등 포함)에 회원국 등의 자격으로 참여 중

○ UNOV(유엔비엔나사무소)
- 위원회 : COPUOS(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SCEAR(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 위원회 : CND(마약위원회), INCB(국제마약통제단), CCPCJ(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AEA(국제원자력기구)

○ CTBTO(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 Wassenaar Arrangement(바세나르체제)

○ NSG(원자력공급국그룹)

○ Zangger Committee(쟁거위원회)

○ HCoC(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지침)

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개요

○ 1953년 유엔 총회에서 Eisenhower 미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 → 1956년 유엔 총회에서 IAEA 헌장 초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1957.7.29. 발효

○ 2021.5월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

■ IAEA 3대 기능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증진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물자 이전, 관련 국제협력 촉진

○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증진 : 사람과 환경을 방사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 국제규범 개발 및 검토서비스 제공

○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safeguards) 적용

■ 구성

○ 총회(General Conference)

-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년 9월 개최

○ 이사회(Board of Governors)

- 총 35개국 : 당연직 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
-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개최되며, IAEA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관

○ 사무국(Secretariat)

- 사무총장(Rafael Grossi) 산하 6개 부서(Department) 및 5개 실(Office)에 직원 2,500여명 근무
-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 북한은 1974년 가입했으나, 1994년 탈퇴를 통보

○ 173개 회원국 중 분담금 규모 11위(2021년도 약 1천만불 : 730만 유로 및 118만 미불)

- 정규분담금 외 기술협력기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핵안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순수 기술공여국으로서 개도국 대상 기술·물자 이전, 교육훈련 등 협력 추진
- COVID-19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Grossi IAEA 사무총장이 중점 추진 중인 동물원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사업(ZODIAC)에 100만불을 기여, 원자력 기술을 통한 글로벌 보건 증진 노력에도 적극 동참

○ 이사국 총 17회 역임(임기 2년) : 지역이사국 12회(최근 2017-19년), 윤번이사국 5회(최근 2015-17년)
- 현재 2021.9월-2023.9월 임기의 윤번이사국 진출 추진중
- 이사국 수임을 통해 북한 핵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 관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IAEA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체제 유지중
- 2020년 신재현 대사 JUSCKANNZ(Grossi 사무총장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IAEA 주요 회원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장 수임

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 CTBT 개요

○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지구상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비확산 조약(1996년 채택)

○ 핵실험 탐지를 위해 국제감시체제(IMS)*와 국제데이터센터(IDC)를 설치하고 현장사찰(OSI)을 행할 것을 규정

* 89개국에 337개 관측소를 설치하고, 비엔나 IDC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

○ 2021.5월 현재 미발효 상태(185개국 서명, 170개국 비준)

※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핵보유국 및 원자로 보유국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8개국(미국,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이 미서명/미비준

■ CTBTO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구성

○ 준비위원회 : 조약 발효 대비 검증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사실상의 조약기구로서 기능
- 연 2회 서명국 총회가 개최되며, 보조기구로 예산·행정 작업반, 기술·검증 작업반, 자문그룹(Advisory Group) 설치

○ 임시 기술사무국(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 준비위원회 회의 운영, 조약 발효 촉진,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

- 사무총장 : Lassina Zerbo(국적: 부르키나 파소 / 2021.7.31. 임기 종료 예정)
  ※ 후임은 아직 미선출(Zerbo 사무총장과 호주 출신 Robert Floyd 경합중)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6년 CTBT 원서명국이자 비준국

○ 북한 핵실험 가능성 대비 CTBTO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중
※ 우리나라 원주 지진파 관측소(KSRS)는 CTBT에 규정된 50개 주요 지진파 관측소 중 하나

○ 1999, 2019년 준비위원회 의장직 및 2003, 2015-2018년 부의장직 수임

○ CTBT 발효촉진 현인그룹 위원 활동(이호진 前 핀란드대사, 김원수 前 유엔고위군축대표)

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 개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빙자한 핵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자간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로,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통제지침 이행과 정보교환 등이 주 활동
-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을 규율하는 지침(소위 '런던 가이드라인')은 1977년,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규율하는 지침은 1992년에 각각 채택

○ 회원국은 주요 핵공급국 48개국(EU는 옵서버로 참여)

■ 구성

○ 총회 : 협의그룹 및 정보교환 회의 결과 청취
- 1년 임기 의장국은 총회 개최지를 기준으로 매년 순환

○ 협의그룹(CG : Consultative Group) 회의
- NSG 지침 및 부록 관련 기술적 사항 논의, 각국의 거부통보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정보교환 회의(IEM :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 주로 새로운 핵확산 추세 및 의심 국가에 대한 정보교환

○ 사무국 : 주비엔나 일본 대표부가 사무국(Point of Contact) 역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95년 가입

○ 2003-2004년(부산 총회 개최), 2016-2017년(서울 총회 개최) 의장직 수임

마.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 개요

○ NPT 제3조 2항(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의 대상물질 정의를 위해 1971년 비엔나에 설립(39개 회원국)

○ 회원국은 NPT 비당사국인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분열 물질 및 쟁거위원회 통제품목상 원자력 장비/물질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 보유

■ 조직

○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통상 10월 NSG 관련 회의와 병행)

○ 사무국 : 주비엔나 영국 대표부가 사무국(Point of Contact) 역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

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개요

○ 무기 등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대 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1994.3.30.자로 해체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 1996.7월 출범

○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두가지 축의 통제를 위한 통제 리스트 작성, 정보교환 및 검토 등 협력 진행(수출통제는 각국 국내법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실시)

- WA가 다루는 이중용도 품목은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9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 WA 활동은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며, 2021.5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 회원국이 참여 중

■ 조직

○ 사무국장 : Philip Griffith 前 주비엔나 뉴질랜드 대사(2012~)

○ 매년 총회(Plenary) 1회, 일반실무그룹(GWG) 회의 2회, 전문가그룹(EG) 회의 2회 및 이행 전문가(LEOM) 회의 1회 개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5년도 GWG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수임(서정하 공사)

○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분쟁시 우리측은 일측조치가 WA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임을 미국, 독일 등 주요 WA회원국과 사무국 등에 제기

*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은 통제조치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사.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설치 : 1959년 유엔총회 결의(1472호)에 의거, 총회 직속기구로 설치

■ 목적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및 외기권 개발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 우주의 군사화 문제는 제네바의 CD(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논의

■ 위원국 : 95개국

■ 조직

○ 회기

- 본회의(main committee) : 연 1회 개최
- 과기소위(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 연 1회 개최, 외기권의 이용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를 논의
- 법률소위(Legal Subcommittee) : 연 1회 개최, 외기권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논의

○ 사무국(OOSA: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 사무국장 : Simonetta Di Pippo(이탈리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2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중

아.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설치 :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로 1992년 설치

■ 위원국 : 40개국(ECOSOC에서 선출, 임기 3년)

■ 조직

○ 사무국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수행

○ 매년 5월경 연례회의, 12월경 속개회의 개최

○ 2021년도(제30차) 의장국 : 이탈리아

- 의장 : Mr. Alessandro Cortese 주비엔나이탈리아대사

■ 기능

○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 분야에서 유엔활동 조정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유엔활동의 감독 및 평가

○ 지역내 또는 지역간 범죄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지원 및 조정

○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준비 및 동 회의에서 제안되는 계획안 심의

◆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3~2011, 2013~2015, 2016~2018, 2021~2023 임기 위원국으로 선출

자.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설치 :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로 1946년 설치

■ 회원국 : 53개국(ECOSOC에서 선출, 임기 4년)

■ 조직

○ 사무국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수행

○ 매년 3월경 연례회의(1회) 개최

- 매년 12월경 예산안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속개회의 개최
- 그밖에 마약위원회 채택 주요문서 이행점검 등을 위한 회기간 회의 수시 개최

※ 산하 위원회로 지역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HONLEA: Meetings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가 있음.

■ 기능

○ 유엔의 마약통제 정책 수립

○ 마약통제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대한 정책지침 제공

○ 마약통제기금(UNDCPF, Fund of the 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및 행정·프로그램 예산 승인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등의 규제에 관한 정책 수립

○ 주요 마약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감독 등 유엔의 마약통제정책 입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3~1968, 1982~1985, 1999~2003, 2006~2009, 2012~2015, 2016~2019 임기 위원국으로 선출

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개요

○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 관련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반부패 분야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주도로 2010.10월 발족

○ 2011.3.8. 기관설립 협정 발효로 국제기구 지위 획득

■ 회원국 : 80개(국제기구 4개 포함)

■ 조직

○ 당사국총회

○ 집행이사회

- 11명의 이사가 개인자격으로 6년(중임가능)의 임기로 활동
- 후보자의 자격과 경험, 지역안배 원칙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국총회에서 선출하되 오스트리아, UNODC에 당연직 각 1석 배분

○ 국제수석자문위원회

○ 국제학술자문위원회

○ 사무국 : 비엔나 근교 락센부르크 소재(직원 약 40여명)

- 학장 : Thomas Stelzer(국적 : 오스트리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는 2010.12.29. IACA 설립협정에 서명(51번째 원서명국), 2011.12.15. 비준(26번째 당사국)하였으며, 2012.2.13. 협정 국내 발효

○ 우리 정부(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매년 5만유로 기여금 납부 중

○ 제1차 당사국총회(2012.11월)시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이 초대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3년 임기, 2015.11월 임기종료)

- 제7차 당사국총회(2018.9월)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집행이사회이사로 선출되어, 2019.11월부터 5년간 활동중
- 오필환 교수가 학술자문위원로 활동(2013~2019(6년) 임기)

○ 우리 정부(국민권익위)는 2020년 제9차 IACA 당사국총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비엔나에서 사무국 주도로 화상회의로 축소 개최)

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설치 : 1966년 총회 결의에 의거 설치

■ 위원국 : 총 60국, 유엔 총회에서 선출(임기 6년)

※ 2002년 UN총회 결의로 2004년 이후 위원국 수를 60개로 확대키로 결정

■ 주요 활동

○ 국가간 국내 상거래법의 조화·조정 방법의 연구, 통일사법의 점진적 채택

○ 통일적인 국내 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지침안 또는 협약안의 준비

○ 상거래법 분야의 비교법적 연구 수행

○ 국제회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 조직

○ 사무국 : 비엔나 소재

- 국장 : Anna Joubin-Brett(국적 : 프랑스)

○ 본회의 : 매년 1회 개최

○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WG I : 중소기업, WG II : 중재, WG III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WG IV : 전자상거래, WG V : 도산법, WG VI: 선박경매)

- 매년 상반기(뉴욕), 하반기(비엔나) 2회 개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위원국으로 지속 활동 중

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설치 : 1967.1월 유엔총회 직속기구로 설치(1985.12월 유엔의 16번째 전문 기구로 출범)

■ 목적 : 개도국 및 전환기 경제권의 공업화 및 기술협력 지원

■ 회원국 : 170개국(2021.4월 기준)

※ 미국(1996.12월), 영국(2012.12월), 프랑스(2014.12월) 캐나다(1993.12월), 호주(1997.12월) 탈퇴

■ 조직

○ 총회 : 2년마다 개최(통상 비엔나에서 개최)

○ 공업개발 이사회(IDB) : 53개 이사국으로 구성

○ 기획예산 위원회(PBC) : 27개 위원국으로 구성

○ 사무국 : 비엔나 소재(직원 약 671명)

- 사무총장 : Li Yong(국적 : 중국)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7.1월 UNIDO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 1987.4월 서울 투자진흥서비스사무소(現 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개설

○ 2012.5월 한-UNIDO 전략적협력 약정 체결

- 우리의 IDF 기여금으로 사업 공동 발굴,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공동사업평가 실시 등 내용 포함

○ 2016.6월 제4차 녹색산업회의 개최(울산)

○ 우리나라는 2020~2021 회계연도 7대 정규분담금 납부국(3.731%)

○ 2020~2023년 임기 IDB 이사국 수임중(1988년부터 8차례 연임)

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설립 :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창설,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 기구화

※ 포괄적 안보 개념(정치·군사 및 경제·인권·환경 등 종합적 고려)에 기초한 유럽국가간의 안보협력기구

■ 회원국 : 유럽 57개국, 협력 동반자국 11개국*

* 아시아협력동반자국 : 한국,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 / 지중해협력동반자국 :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 조직

○ 정상회의 : 최고위 정책결정 회의체

○ 각료이사회 : OSCE 회원국 외교장관회의

○ 상설이사회 : OSCE의 정책결정 및 상설 회의체

○ 안보협력포럼 : 군비통제, 군축, 신뢰구축 등 정치안보 이슈 협의를 위한 상설 회의체

○ 인간부문이행회의 : 회원국의 인간부문 이행 평가, 상설이사회에 권고

○ 경제환경포럼 : 경제, 환경, 안보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회의

○ 사무국 : 비엔나 소재

- 사무총장 : Helga Maria Schmid(국적 : 독일)

■ 주요 활동

○ 우크라이나, 남코카서스, 남동유럽, 몰도바 등 선거 및 인권 상황 감시, 소수민족보호, 신뢰 구축, 분쟁예방 및 중재 활동 전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94년 이래 정상회의, 평가회의, 각료회의에 협력동반자국(Partner for Cooperation)으로 참석 / 1996.12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상시 참여 지위 확보

○ 2008.10월~2017.4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 선거 참관단 파견, △아프가니스탄 선거 관련 사업 지원 등

○ 여타 아시아협력동반자국가들과 윤번제로 OSCE-아시아회의 개최중

- 2001.3월(서울), 2005.4월(서울), 2010.5월(서울), 2015.6월(서울), 2020.10월(화상) 개최

○ 2017년부터 매년 OSCE 사무국과 공동으로 지역간회의 개최중

- 2017.4월(사이버안보, 서울), 2018.3월(폭력적 극단주의, 서울), 2019.4월(사이버안보, 서울), 2020.10월(신기술과 안보, 화상)
- 2021.6.22.~23., 사이버안보 주제로 금년 회의 개최 예정(화상)

하. 석유수출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설치

○ 1960.9월 유가 하락 방지를 위해 이라크 정부가 5대 석유 생산·수출국*을 초청하여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결성 결정

* 당시 세계 원유 수출의 85%정도를 차지하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 회원국 : 13개국

○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콩고, 적도기니, 가봉, 리비아, 나이지리아, UAE

※ 인도네시아는 1962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산유량 감소 및 석유소비량 증가로 석유수입국이

됨에 따라 2008.12.31. 회원국 자격 정지(suspension), 2016년 다시 회복했으나 2016년 171회 총회에서 다시 자격 정지

※ 에콰도르는 1973년 정회원 가입 후, 1992.12월 자격 정지되었다가 2007.10월 자격 회복했으나 2020.1월 탈퇴

※ 카타르는 1961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2019.1월 탈퇴

■조직

○ 총회 : 회원국 석유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

○ 이사회 :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결정은 단순 과반으로 채택

- 회원국별 1명의 이사(임기 2년)를 두며, 1인 1표 원칙

○ 사무국 : 비엔나 소재

- 사무총장 : Mohammed Barkindo(국적 : 나이지리아)

■OPEC+

○ OPEC 회원 13개국과 10개* 非OPEC 주요 산유국 연합체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러시아, 남수단, 수단

○ 2016년 OPEC-非OPEC 간 협력 선언문(Declaration of Cooperation) 채택(발효 기간 6개월로 한정) 및 2019년 영구적 플랫폼 구축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헌장(Charter of Cooperation) 승인

오스트리아 개황

· **인　쇄** | 2021년 6월
· **발　행** | 2021년 6월
· **발행처** | 외교부 유럽국 중유럽과

· **디자인** | (주)마스타 (출판등록 제2011-000063호)
· **인 쇄·제 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